

碩士學位論文

開發途上國間の經濟統合方向에 관한 研究

1990年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企業管理 專攻

崔 勝 豪

開發途上國間の 經濟統合方向에 관한 研究

A Study on Economic integration direction of
developing Countries

指導教授：姜 錫 中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0年 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企業管理 專攻

崔 勝 豪

論文認准書

崔勝豪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0年 月 日

主審教授 _____ 印

副審教授 _____ 印

副審教授 _____ 印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方法과 構成內容	2
II. 經濟統合에 관한 一般理論	3
1. 經濟統合의 定義와 理論의 成立過程	3
(1) 經濟統合의 定義	3
(2) 經濟統合 理論의 成立過程.....	4
2. 經濟統合의 諸類型과 統合의 條件	6
(1) 經濟統合의 諸類型.....	6
(2) 經濟統合의 條件	9
3. 經濟統合 理論에 대한 接近視角 및 分析對象.....	10
(1) 經濟統合理論의 接近視角	10
(2) 經濟統合理論의 分析對象	12
III.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理論	18
1. 工業化政策과 經濟統合의 필요성	18
2. 經濟統合 形成原理에 관한 諸理論	20
(1) 經濟統合 形成原理에 관한 諸 論議	20
(2) 經濟統合의 構成理論.....	23
(3) 經濟統合의 分業理論.....	25
3. 經濟統合의 期待效果	27
IV.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의 實際	29
1. 西유럽의 經濟統合	29

(1) 유럽공동體的 成立背景	29
(2) EC의 共同政策	30
(3) EC의 對外關係	33
2. 中南美地域의 經濟統合	36
(1) 라틴아메리카 自由貿易聯合	36
(2) 라틴아메리카 統合聯合	37
3. 아프리카 地域의 經濟統合	38
(1) 아프리카地域 經濟統合의 成立背景	38
(2) 西部아프리카諸國 經濟共同體	39
V.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에 관한 理論的 接近	41
1. 開發途上國經濟의 特性	41
2. 經濟統合에 대한 一般의理論 適用의 限界.....	42
(1)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의 特性	42
(2) 開發途上國 經濟統合의 問題點	43
(3) 開發途上國 經濟統合에 대한 一般의 理論適用의 限界	44
3.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의 方向	45
VI. 要約 및 結論	50
參考文獻	53
ABSTRACT	57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第二次世界大戰 이후 國際經濟秩序는 自由貿易原則에 바탕을 둔 汎世界主義의 기초 위에서 貿易面에서의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과 通貨面에서의 國際通貨基金(IMF)을 양대지주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러한 國際經濟秩序의 확립은 戰後 世界經濟의 發展과 貿易擴大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이러한 汎世界的自由貿易秩序는 GATT, IMF체제의 弱化和 더불어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시현하게 되었다. 6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달러貨의 위기와 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과동이 계기가 되어 市場과 資源을 둘러싼 國家間 競爭이 격화되었고 地域主義(Regionalism)와 資源民族主義(Resouce Nationalism) 등의 新保護貿易主義가 세계 전체에 풍미하게 됨으로써 無差別 自由貿易原則에 입각한 GATT체제는 사실상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50년대 이후 國際經濟의 두드러진 現象의 하나는 經濟的 및 政治的인 共同利益을 중심으로 인접한 國家들이 地域的經濟統合을 結成함으로써 域內的으로는 貿易 및 資本協力등의 分野에서 互惠·無差別 待遇의 原則을 遵守하는 한편 域外的으로는 差別待遇의 原則을 적용하여 域內的인 貿易自由화와 域外的인 貿易制限 傾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經濟統合의 움직임과 그로 인한 世界經濟의 地域化(Regionalization) 내지 블럭(Bloc)化 경향은 先進諸國에서는 이미 대단한 效果를 거두고 있으며, 이에 자극을 받은 開發途上國에서도 經濟統合을 서둘러 實施하고 있다. 즉 西유럽地域에서는 1958년 유럽經濟共同體(EEC)를 비롯하여 이에 對應하기 위한 유럽自由貿易聯合(EFTA)이 1960년에 結成되었으며 1967년 EEC는 유럽石炭·鐵鋼共同體(ECSC)와 유럽原子力共同體(EURATOM)을 統合하여 유럽共同體(EC)를 1967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中南美地域에서는 1961년 라틴아메리카自由貿易聯合(LAFTA)을 비롯하여 中南美共同市場(CACM)과 안데스共同市場(ANCOM)이 1961년과 1969년에 각각 結成되었으며, 1973년에는 카리브共同體(CARICOM)가 1981년에는 LAFTA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라틴아메리카 統合聯合(LAIA)을 結成하였으며, 아프리카地域에서는 1964년 中部아프리카 關稅經濟同盟(UDEAC)을 비롯하여 東아프리카 共同體(EAC)와 西아프리카 經濟共同體(CEAO)가 1967년과 1974년에 각각 結成되었으며 1975년에는 言語障壁을 초월한 광범위 協力體系인 西部아프리카諸國 經濟共同體(ECOWAS)가 結成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아시아地域에서는 東南亞地域의 國際間 協力機構인 東南亞國家聯合(ASEAN)이 結成되었으며, 현재 太平洋自由貿易地域案(PAFTA), 太平洋貿易開發機構案, 環太平洋連帶

案 등이 구상중에 있다.

이와같이 強化一路에 있는 經濟統合과 經濟의 地域化 현상은 전통적인 國際經濟理論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經濟統合에 관한 理論分析은 주로 關稅同盟理論에 근거를 두고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關稅同盟理論은 關係諸國간의 經濟發展隔差, 經濟構造上的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에 있어서 傳統的인 工業國間的 市場統合을 그 研究對象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의 工業國과는 經濟發展段階에서나 經濟 및 貿易構造面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開發途上地域의 經濟統合을 이들 理論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요인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本 研究는 先進地域과 開發途上地域의 經濟統合 理論들을 살펴보고 이들 一般的 理論들의 開發途上國간 經濟統合適用의 限界를 규명하여 開發途上國型 經濟統合의 새로운 接近方法을 모색해 봄으로써 向後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開發途上國간 經濟統合의 理論的 發展 및 開發을 위한 方向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方法과 構成內容

本 研究는 經濟統合의 諸理論에 관한 既存文獻의 研究를 통해서 유럽諸國을 모델로하는 先進地域의 經濟統合理論을 바탕으로 開發途上國間的 經濟統合理論을 考察하고 새로운 接近方法을 모색함에 있어 實證的 分析보다는 주로 理論的으로 考察하는 方法을 택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構成되었다.

I 章 序論에 이어 II 章에서는 經濟統合理論의 成立背景과 統合의 諸類型과 條件 그리고 서로 상반된 두가지 接近視角(自由貿易主義的 接近과 保護主義的 接近)과 分析對象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III 章에서는 開發途上國間的 經濟統合의 必要性和 形成原理에 관한 諸理論, 經濟統合의 效果에 관해 설명하고, IV 章에서는 經濟統合의 實際로서 西유럽의 經濟統合과 中南美地域 및 아프리카地域의 經濟統合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V 章에서는 開發途上國經濟의 特性을 알아보고 先進地域의 經濟統合理論이 開發途上國間的 經濟統合에 適用될 수 없는 이유를 규명하고 開發途上國型 經濟統合理論이 새로이 모색해야될 기본방향을 고찰한다. VI 章에서는 本 研究의 要約 및 結論을 제시하였다.

II. 經濟統合에 관한 一般理論

1. 經濟統合의 定義와 理論의 成立過程

(1) 經濟統合의 定義

經濟統合(Economic integration)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본질적인 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經濟統合을 관찰해 온 여러 學者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政治經濟學的 視角과 近代經濟學的 視角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y)의 視角에서 經濟統合을 관찰한 學者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 Myrdal에 의하면 經濟統合을 機會均等の 西歐的 理想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過程(a process)으로 파악하고 있다.¹⁾ 즉 社會는 利益共同體 전체의 最適目標를 향해 動態的으로 접근해 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既存秩序의 수정과 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는 일정한 規範에 의해 유도되어야 한다. 또한 規範은 전체의 最適目標를 위해 個別目標를 조정하고 統合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統合이란 이러한 社會·經濟的 變化過程內에서 국가적 혹은 국제적 간여를 합리화하는 수단인 동시에 規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 Erbes는 經濟統合을 社會·經濟的 最適狀態로의 接近過程으로 파악했다.²⁾ Erbes에 의하면 각 經濟主體들과 이들 主體들로 형성된 全體共同體와의 결합관계에서 經濟統合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結合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개별주체들 간에 財貨, 要素 및 情報의 흐름에 관한 경제적 상호관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개선 되어야 한다. 둘째, 각 주체의 計劃目標間에 相互兩立性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개별주체의 목표는 集團的 共同體가 추구하는 社會·경제적 最適狀態를 향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 Erbes는 이러한 個別主體의 相互結合을 통해 하나의 共同體로 接近해 가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經濟統合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近代經濟學的 시각에서 經濟統合을 관찰한 諸學者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 Tinbergen은 經濟統合을 最適의 經濟狀態의 실현을 阻害하는 人爲的 障害를 除去하여 調整(coordination)과 統一(unification)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의식적으로 導入하여 가장 소망스

1) G. Myrdal, *An International Economy*, (New York : Harper & Row, 1964), p. 11.

2) R. Erbes, *L'Integration Economique Internationale*,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6), p.

러운 國際經濟의 올바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Tinbergen은 국가간 經濟關係의 확대를 통한 經濟的 利益의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간 自由貿易, 自由競爭의 실현을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政策的 수단으로서 經濟統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편 B. Balassa의 정의에 의하면 그는 經濟統合을 하나의 過程인 동시에 하나의 狀態로 파악하고 있다.⁴⁾ 즉 經濟統合을 動態的 過程으로 파악할 경우 個別國家에 소속된 經濟單位 사이의 차별을 없애는 여러가지 조치를 말하며, 經濟統合을 하나의 狀態로 파악할 경우 國民經濟 사이의 다양한 差別形態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또한 J. Weiller는 經濟統合을 國家主權의 개념이 희박하게 되고 政府間 機構 혹은 超國家的 機構가 각국의 經濟發展 및 交易을 주도하는 過程⁵⁾으로 파악하여 超國家的인 統合關係를 상정하고 있으며, G. Haberler는 經濟統合을 관련지역내에서 보다 밀접한 經濟關係를 수립하는 것으로⁶⁾ 파악함으로써 經濟統合의 범위를 일반적인 經濟協力の 강화라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관찰했다.

따라서 經濟統合의 形態와 特性은 각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觀察者의 觀察時點과 接近方法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劃一的이고 確定的인 개념을 설정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經濟統合에 관한 定義를 要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經濟統合이란 經濟的으로 共同의 利害關係를 가지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2個國 이상의 國家間에 同盟을 맺고 商品 및 生産要素의 自由移動을 보장하는 여러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자적인 廣域市場圈을 형성하여 각 加盟國은 經濟的·技術的 利益을 향유하며, 統合體 전체의 厚生增進을 꾀하는 국제간의 經濟協力이라 할 수 있다.

(2) 經濟統合 理論의 成立過程

經濟統合理論이 體系的으로 정리되고, 國際經濟學의 한 분야로서 정착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經濟統合理論은 한마디로 獨立된 國民經濟間 통합의 형태, 메카니즘, 취지 및 效果 등을 다루고 있다. 經濟統合은 特定 國家들 간에 다른 제3국에 대해서는 許容되지 않는 경제적 惠擇의 交換을 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排他的인 惠擇은 加盟國들이 共同으로 추구하는

3) J. Tinbergen,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 : N. H. Co., 1965), p. 57.

4)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69), p. 1.

5) J. Weiller, *Les degrés de L'intégration et les chances d'une zone de cooperation internationale*, (Paris : R. E., 1958), (孫炳海, 經濟統合論, 서울 : 法文社, 1990, p. 9에서 再引用)

6) G. Haberler, "Integration and Growth of the World Econom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4, pp. 1~2.

特定한 經濟的 目標의 실현을 취지로 한다.

經濟統合과 가장 혼동되는 개념중의 하나는 特惠待遇(preferential treatment)이며 실제로 兩者를 명확히 구분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⁷⁾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開發途上國들이 추진하고 있는 經濟統合의 거의 전부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特惠地域에 지나지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經濟統合의 예로서는 아직까지 EEC 및 EFTA에 국한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⁸⁾

사실 歷史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전적인 分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關稅同盟에 대한 J. Viner 이전의 論議들은 매우 희소하며, 經濟統合理論의 起源과 관련하여 學者들 간에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

예를들어 1703년의 Methuen 條約⁹⁾ 및 1860년의 Cobden 條約과 같은 特惠協定(Preferential arrangements)의 締結이 國際貿易이나 資源配分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古典派 및 新古典派 學者들 간에 많은 論難이 전개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논란들이 후일 經濟統合理論의 形成에 크게 기여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A. Smith나 D. Ricardo 등의 學者들은 Methuen條約으로 인한 貿易轉換效果의 分析에 관심을 두었고, Cobden 條約에 관해서도 貿易轉換效果를 중심으로 協定의 效果를 分析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經濟統合과 관련된 論文들은 特定國家간 최소한 自由貿易地域의 실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特惠地域은 이 영역에서 除外되어야 할 것 같다.

한편 이미 自由貿易論者들의 理論이 등장한 이후 特惠協定이 國際貿易이나 資源配分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效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나 1833년의 Zollverein(獨逸關稅同盟)이 탄생하면서 부터 견해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一部는 關稅同盟 會員國간 貿易의 自由化를 들어 보다 自由貿易主義的 측면을 강조하였는가 하면, F. List¹¹⁾와 같은 保護主義者들은 제3국에 대한 差別待遇가 가져오는 貿易의 轉換的 效果를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List類의 立場은 1960년대 중반이후 H. G. Johnson 및 Cooper-Massell에 의한 公共財保護理論 또는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理論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古典 및 新古典派 학자들의 견해가 비록 貿易創出, 貿易轉換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

7) GATT 24條는 自由貿易地域 이상의 형태를 經濟統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特惠地域과 區分하여 허용하고 있다. 또한 自由貿易地域 및 關稅同盟의 내용과 조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法條文에 의한 정의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8) 金世源, “經濟統合의 理論과 實際”, 國際經濟研究, 第6集, 1986, p. 7.

9) Methuen條約은 영국산 羊毛에 대한 포르투갈 측의 금지관세 폐지와 포르투갈산 포도주에 대한 영국의 特惠關稅를 협정한 1703년의 양국간 關稅協定을 말한다.

10) D. O'Brien, “Customs Unions :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8(1976), pp. 540~563.

11) F. List, *The nation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London : Longmans Green, 1885).

있다해도 그 研究對象이 광범위하고 理論이 분명치 않으며 개괄적으로 서술되고 있어 關稅同盟 고유의 靜態的 效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經濟統合理論이 理論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1950년 J. Viner의 關稅同盟(The Customs Union Issues)에 이르러서이다.¹²⁾

그에 의한 關稅同盟理論은 오늘날 經濟統合理論의 發展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貿易創出과 貿易轉換效果를 토대로하여 關稅同盟의 生産效果를 分析한 Viner의 理論은 그 후 J. E. Meade와 R. Lipsey 등으로 계승되면서 특히 消費效果分析에 있어 보완과 수정을 거듭하였고 Lipsey는 關稅 및 交易條件 效果 등의 도입을 통하여 관세동맹의 일반이론을 定立하고자 시도했다.¹³⁾ 또한 이는 Bhagwati와 Melvin등에 의해서 生産效果分析이 더욱 상세하게 이루어졌고, Johnson 및 Bhagwati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關稅同盟의 綜合效果分析이 다양하게 展開되기 시작했다.

1957년 Rome條約을 계기로 이상과 같은 靜態分析 뿐만 아니라 動態的 分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J. E. Denieou, T. Scitovsky 등에 의한 大市場理論이 성립되기도 했다. 이러한 經濟統합의 動態的 效果의 규명은 1960년대 이후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형성에 많은 자극을 주었으며, 그 결과 Linder 등은 經濟統合을 工業化 政策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¹⁴⁾ 또한 先進國과 經濟發展段階가 다른 諸國家間의 經濟統合에는 關稅同盟理論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Cooper-Massell類의 工業化에 관련된 理論, 經濟統合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構成理論, 經濟統合의 域內分業理論등 開發途上國들의 특수성을 강조한 諸理論들이 出現하게 되었다.

2. 經濟統合의 諸類型과 統合의 條件

(1) 經濟統合의 諸類型

經濟統合은 關聯地域內에서의 市場結合方法, 그 內部結束度, 기타 域內協力の 정도에 따라 다양한 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여하에 따라 域內外 市場組織이나 分業關係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고 있다.

12) J. Viner,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3).

13) R. G. Lipsey,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London : Weidenfeld & Nicolson, 1970).

14) S. B. Linder, *Trade &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Inc., 1966), Ch. III, Section 2.

(a) 制度的 統合과 機能的 統合

經濟統合은 統合의 主體와 動機에 따라 制度的 統合(institutional integration)과 機能的 統合(functional integr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制度的 統合은 經濟統合에 참가하는 각 經濟主體들 상호간의 合意에 의해 統合의 條件과 形態를 결정하는 방식의 經濟統合을 의미한다. 이러한 制度的 統合은 각국의 政府 혹은 각 經濟集團의 공식적 협력조치에 의해 결성되므로 公的인 統合이라고 한다.

機能的 統合은 民間經濟主體의 利潤動機에 의해 국경을 초월한 經濟活動이 전개되고 그러한 國際的 經濟活動이 특정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나타나는 地域的 經濟圈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 경우 地域的 經濟圈의 형성주체는 個別企業이므로 이러한 결합현상을 私的인 統合이라고 한다.

(b) 垂直的 統合과 水平的 統合

經濟統合을 구성하는 각 經濟主體들 상호간의 結合關係에 따라 垂直的 補完關係에 있으면 垂直的 統合(vertical integration), 水平的 相互依存關係에 있으면 水平的 統合(horizontal integr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垂直的 統合은 先進國과 開發途上國간의 統合, 公산품 수출국과 1차산품 수출국간의 統合을 의미한다. 상이한 經濟構造를 가진 국가간의 統合이므로 統合效果의 分배가 커다란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相互間 經濟的 補完關係의 유지 및 활용이 統合의 중요한 동기이나 開發途上國의 先進國에 대한 經濟依存關係의 심화 내지 經濟從屬化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水平的 統合은 經濟發展段階가 유사한 국가 끼리의 統合으로써 주로 先進國간의 統合形態이다. 수평적 통합에서는 각 加盟國의 발전단계가 유사하므로 競爭促進과 動態的 效果를 가져오고, 經濟的 자주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開發途上國간에 水平的 統合을 실시할 경우 技術과 資本의 부족으로 域內結束에는 한계가 있다.

(c) 全面的 統合과 部門別 統合

經濟統合은 통합대상 영역의 크기에 따라 全面的 統合(overall integration)과 部門別 統合(sectional integr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全面的 統合은 經濟統合에 참여하고 있는 各國 혹은 集團이 각자의 市場을 일괄 개방하여 統合體 전체가 하나의 市場圈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모든 經濟去來가 統合의 대상에 포함된다.

部門別 統合이란 統合 加盟國의 특정 또는 수개의 產業部門간에 統合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각국의 政治·經濟的 주권행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統合으로 인해 각국의 經濟的 효율성이 크게 기대되는 部門에 대해서만 相互間 市場을 개방하거나 共同生産計劃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d) 發展段階別 統合의 諸形態

B. Balassa는 經濟統合을 內部結束度の 정도와 進行情程에 따라 自由貿易地域, 關稅同盟, 共同市場, 經濟同盟, 完全經濟統合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며¹⁵⁾ 이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이행해 가는 動態的 過程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經濟統合 形態를 취할 수 있다.

① 自由貿易地域(free trade area)

經濟統合의 가장 초기적인 단계로서 統合에 참가한 각 加盟國 相互間에는 關稅를 점진적으로 引下 또는 撤廢하여 域內의 自由貿易을 보장하는 한편, 非加盟國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關稅政策 및 貿易制限措置를 취하는 형태의 經濟統合을 의미한다. 현실적인 예로는 유럽 自由貿易聯合(EFTA) 및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自由貿易聯合(CERTA) 등이 있다.

② 關稅同盟(customs union)

對域外共通關稅를 부과하는 형태의 經濟統合이다. 즉 加盟國 상호간에는 商品의 自由移動이 보장될 뿐 아니라 域外非加盟國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해서는 각국이 공통의 輸入關稅를 부과하는 형태의 統合이다. 2차대전 후 베네룩스 關稅同盟과 아프리카지역에서의 經濟統合이 대부분 이 범주안에 들어간다.

③ 共同市場(common market)

域內諸國間 生産要素의 自由移動이 보장 되고 있는 形態로서 加盟國間 財貨뿐만 아니라 勞動, 資本과 같은 生産要素의 이동이 보장되는 統合을 이루고 域外 非加盟國에 대해서는 각국이 共同의 關稅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形態의 統合이다. 그 예로는 중남미 共同市場(CACM), 카리브 共同市場(CARICOM) 등이 있다.

④ 經濟同盟(economic union)

加盟國間의 貿易의 自由化와 生産要素의 자유로운 移動 뿐만 아니라 加盟國의 金融, 財政, 通信, 運送, 農業 등 經濟政策의 조정과 협력이 꾀해지며 共同經濟政策이 수행되는 형태의 統合이다. 현재 유럽共同體(EC)가 이러한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⑤ 完全한 經濟統合(complete economic union)

加盟國 상호간에 超國家的 機構를 설치하여 그 機構로 하여금 각 加盟國의 모든 社會·經濟政策을 調整, 統合, 管理하는 형태의 統合을 의미한다. 이는 經濟統合의 가장 완벽한 形態의 統合類型이며, 각국은 사실상 하나의 單一經濟로 統合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完全 經濟統合은 각국의 國家主權이 포기된 單一國家로의 統合을 의미하며 아울러 政治的 統合까지 併行하게 된다.

15) B. Balassa, op. cit., p. 2.

(2) 經濟統合의 條件

(a) R. Erbes의 條件¹⁶⁾

첫째, 連結性

統合에 참가하는 각 주체간에 財貨, 生産要素 및 情報에 관한 상호교류를 점진적으로 統合·發展시켜가야 하므로 이들 主體들의 경제활동에는 相互關聯性과 連結性이 存在해야 한다.

둘째, 兩立性

統合에 참가하는 주체들의 經濟計劃 및 經濟政策은 그들 고유의 目的을 가지고 있으나 統合體가 結成되면 공동체의 목표가 별도로 存在한다. 따라서 統合體結成이 가능하려면 이들 個別主體의 政策目標과 統合體 전체의 政策目標가 서로 竝存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서로 調和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收斂性

각 주체간의 相異한 政策들은 統合過程에서 共同體의 最終目標를 위해 점진적으로 收斂되고 상호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統合에 참가하는 각국 經濟의 經濟政策, 經濟行爲 및 社會的 理想追求에 대한 價値基準 등에서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통점은 統合에 참가하는 각국의 消費패턴이 유사하고 經濟發展의 수준이 비슷하며, 경제의 開放度가 비슷하여 對內外 經濟政策의 제목표가 하나의 共通分母를 가질 수 있을 때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 J. F. Deniau의 條件¹⁷⁾

첫째, 각국의 經濟發展 水準이 유사해야 한다.

둘째, 각국 經濟의 잠재력에 있어서 異質性이 存在해야 하고, 각국의 政策은 可變的이고 調整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각국은 확대된 시장내에서 特化의 機會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諸經濟가 반드시 補完的일 필요는 없다.

16) R. Erbes, op. cit., pp. 106~135. (孫炳海, 前掲書, pp. 22~23에서 再引用)

17) J. F. Deniau, *The Common Market: its structure and purpose*, (London: 1960), p. 41.

(c) R. F. Sannwald 및 J. Stohler의 條件¹⁸⁾

- 첫째, 地理的, 文化的으로 유사한 關係가 있어야 한다.
 둘째, 共通的인 利害關係가 있어야 한다.
 셋째, 經濟構造의 잠재적인 補完關係가 있어야 한다.
 넷째, 相對國에 대한 需要·供給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大量生産에 의한 利益 取得 可能性이 있어야 한다.

(d) F. Kahnert의 條件¹⁹⁾

- 첫째, 加盟國 相互間에 유사한 經濟發展 段階여야 한다.
 둘째, 域內交通 條件이 완비되어야 한다.
 셋째, 經濟政策의 運用에 있어서 調和와 妥協이 存在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利益分配에 관한 制度的 裝置가 필수적이다.

(e) E. Thorbecke의 條件²⁰⁾

- 첫째, 統合體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國際分業의 범위와 貿易의 규모가 확대된다.
 둘째, 統合體의 經濟規模가 클수록 生産費는 한층 더 인하되고 生産能率은 향상되며 이에 따라 잠재적 利益은 증대된다.
 셋째, 國家간의 經濟構造가 경쟁적이고 잠재적으로 보완적일 경우 經濟的 厚生은 증대된다.
 넷째, 統合體 내에서 關稅水準이 낮고 貿易 및 支拂制限措置가 철폐되고, 域外地域에 대한 差別措置가 완화된다면 국제적으로 資源의 最適配分이 실현된다.

3. 經濟統合 理論에 대한 接近視角 및 分析對象

(1) 經濟統合理論의 接近視角

經濟統合은 特定國家들간 다른 제3국에게는 許容되지 않는 경제적 혜택의 交換을 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排他的인 혜택은 加盟國들이 共同으로 추구하는 특정 經濟的 目標의 실현을 취지

18) R. F. Sannwald and J. Stohler, *Economic Integrati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9), p. 38.

19) F. Kahnert, *Economic Integ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OECD Development Center Studies, 1969), pp. 29~48.

20) 朴壽伊, 國際貿易論, (서울 : 博英社, 1980), p. 648.

로 하고 있다. 따라서 加盟國간에는 貿易自由化가 피해 지는 반면 非加盟國에 대해서는 貿易差別化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므로 經濟統合은 自由貿易과 關稅에 의한 保護貿易의 兩面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經濟統合의 經濟的 得失效果에 관한 自由貿易論者와 保護主義者들의 다양한 견해가 표명되었다.

(a) 自由貿易主義的 接近

自由貿易主義的 接近은 古典派 統合論者들의 주요 관심이 되었던 關稅同盟의 資源配分效果의 分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의 견해는 關稅同盟은 加盟國간에 關稅 및 기타의 貿易障壁을 제거하게 되어 貿易自由化를 이루게 하므로 同盟地域內에서는 自由貿易으로 인한 資源配分の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J. Viner는 關稅同盟이 貿易創出을 극대화 할 수 있는 自由貿易主義的 條件을 加盟國간의 生産條件의 變化를 통해 관찰함으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Viner의 입장은 그후 J. E. Meade²¹⁾ R. Lipsey²²⁾ 등으로 계승되면서, 특히 關稅同盟의 설립에 따른 需要의 측면에서 크게 보완과 수정을 거듭하였다. 需要의 完全非彈力的이라는 가정을 완화한다면 商品價格의 상대적 변화에 의하여 貿易轉換의 효과가 설사 국제적인 차원에서 資源配分の 비효율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域內 加盟國의 厚生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므로서 關稅同盟理論은 보다 현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Lispey는 關稅 및 交易條件 效果 등의 도입을 통하여 關稅同盟의 一般理論을 定立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이미 古典理論에 의하여 포괄적으로만 지적되어 왔던 統合에 따르는 動態的 效果와 交易條件效果에 관한 연구가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加盟國間 市場統合에 의한 廣域化市場(enlarged market)의 효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제껏 經濟的 障壁에 의하여 고립되어 왔던 國民經濟單位의 生産物 및 生産要素市場간의 統合이 실현된다면 이론적으로 볼때 內部的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 및 外部經濟(external economies)를 가져올 수 있다.

H. G. Johnson이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效果가 반드시 肯定的으로 作用할 수 만은 없으며 加盟國內 費用條件에 의해 좌우된다.²³⁾ 또한 市場構造의 변화에 있어서도 大多數의 學者가 보다 競爭性·效率性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一部는 오히려 獨寡占化를 촉진시킨다는 反論도 제기하고 있다.²⁴⁾

21) J. E. Meade,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Amsterdam : North-Holland, 1955).

22) R. G. Lipsey,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 A General Servey", *Economic Journal*, Sept. 1960, pp. 496~513.

23) H. G. Johnson, "The Economic Theory of Customs Unions", *Parkistan Economic Journal*, Vol. 10, p. 25.

24) B. Balassa, op. cit., p. 165.

(b) 保護主義的 接近

H. G. Johnson은 一定國家들이 共同으로 經濟領域을 설정하고 非加盟國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共同의 目的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는 域外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保護主義的 성격을 띄게 된다고 하였다.²⁵⁾ 이러한 측면의 保護論的 接近은 그 기원을 獨逸關稅同盟 (Zollverein)과 같은 關稅同盟을 幼稚産業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保護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한 F. List와 같은 保護論者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List類의 保護論的 立場은 經濟統合理論의 展開過程에서 하나의 轉換期를 이룬 1965년 거의 동시에 發表된 C. A. Cooper—B. F. Massell과 H. G. Johnson 등의 論文에 의해 계승되었다.²⁶⁾

이들은 古典的 理論들이 自由貿易主義的 시각에만 집착 했던데에 반하여 非加盟國에는 확대되지 않는 保護 및 特惠措置가 加盟國經濟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중요시 하고 있다. 사실, 資源配分의 效率性이나 厚生效果만을 고려한다면 關稅同盟을 비롯한 經濟統合은 하등의 의의를 갖지 못하며 보다 적절하고도 無差別的인 保護措置의 一方的인 緩和가 더 큰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次善의 理論이 말하여 주듯이 어떤 形態이던 간에 經濟統合의 추진 그 자체는 그 以前狀態에 비하여 또다른 歪曲을 초래하므로 항상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²⁷⁾

한편 關稅同盟은 域外國에 대해서는 共同關稅를 부과하고, 加盟國 相互間에는 關稅를 철폐 내지 경감함으로써 差別關稅부과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데 關稅同盟理論은 이와같은 差別關稅를 分析對象으로 함으로써 關稅理論에서 하나의 특수한 분야로 간주될 수 있으며, 一國單位の 貿易制限效果만이 아니라 地域單位の 集團的 貿易制限效果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保護主義的 特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保護論的 接近은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에 관한 理論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2) 經濟統合理論의 分析對象

(a) 關稅同盟의 靜態的 分析

關稅同盟의 靜態的 效果는 J. Viner에 의해 生産效果에 대한 分析이 이루어졌고, 消費面에서 R. G. Lipsey나 J. Meade 등의 分析이 이루어졌으며, H. G. Johnson의 部分均衡分析을 통해 綜合效果에 관한 分析이 이루어졌다.

25) H. G. Johnson, "An Economic Theory Protectionism, Tariff Bargaining and the Formation of Customs Un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3(1965), pp. 256~283.

26) C. A. Cooper & B. F. Massell, "A Now Look at Customs Union Theory", *Economic Journal*, Vol. 75(1965), pp. 742~7.

27) 金世源, 前揭書, pp. 7~18.

Viner는 關稅同盟의 結成에 따른 經濟的 效果를 貿易創出效果(trade creating effect)와 貿易轉換效果(trade diverting effect)를 통해 分析함으로써, 加盟國間에 輸入關稅를 철폐함으로써 國內市場에서 야기되는 財貨의 相對價格 變化가 同盟地域 내지 世界全體의 厚生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를 체계적으로 分析하고 있다.

分析上 Viner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²⁸⁾

- ① 각국의 經濟는 關稅同盟 結成後에 있어서 完全雇傭의 상태에 있다.
- ② 수입재에 대한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零(完全非彈力的)이다.
- ③ 수입재의 平均生産費는 不變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假定위에서 Viner는 關稅同盟의 結成에 따른 두가지 相衝된 效果를 제시한다. 關稅同盟이 結成되어 加盟國 상호間에 關稅가 철폐되면 우선 가맹국간의 域內 輸入價格이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종래 加盟國間에 比較優位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關稅障壁으로 인하여 域內에서 流通되지 않았던 商品이 交易되어 加盟國間에 새로운 貿易이 創出된다. 이와같이 關稅同盟이 結成되어 域內貿易이 확대되고 財貨의 供給源이 域內의 高生産費供給源에서 低生産費供給源으로 代替되는 現象을 貿易創出效果(trade creating effect)라 한다.

이에 대하여 域內에서 生産費가 가장 낮은 供給源이 世界에서 가장 낮은 國家라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關稅同盟은 共同의 關稅를 통해 域外 國家들로부터 輸入되는 財貨의 價格을 상승시킴으로써 供給國은 生産費가 낮은 域外 國家로부터 生産費가 높은 域內 國家로 轉換하게 되는데 이러한 現象을 貿易轉換效果(trade diverting effect)라 하였다.²⁹⁾

Viner는 貿易創出效果는 가맹국 전체의 立場에서 볼때 資源의 最適配分에 接近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世界全體의 厚生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貿易轉換效果의 경우에 있어서는 域外에서 輸入하던 저렴한 財貨가 域內의 高生産費 國家의 財貨로 代替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厚生에 負(-)의 影響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關稅同盟의 效果分析에 있어서 貿易創出效果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다. 그러나 貿易轉換效果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다양하다. 즉 貿易轉換이 반드시 厚生을 감소시킨다는 견해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 Viner의 財貨에 대한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完全非彈力的(0)이라는 基本假定은 매우 비현실적이다.³⁰⁾

關稅同盟이 結成되어 財貨의 相對價格이 변화하게 되면, 財貨間 代替效果가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財貨間의 消費組合比率도 달라지므로 消費行態가 變化하게 될 것이다. 즉 關稅同盟이

28) 朴鍾植, 國際經濟學, (서울: 貿易經營社, 1986), pp. 315~6.

29) 朴鍾植, 上揭書, p. 314.

30) 尹康熙, 經濟統合에 관한 理論的 考察,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89,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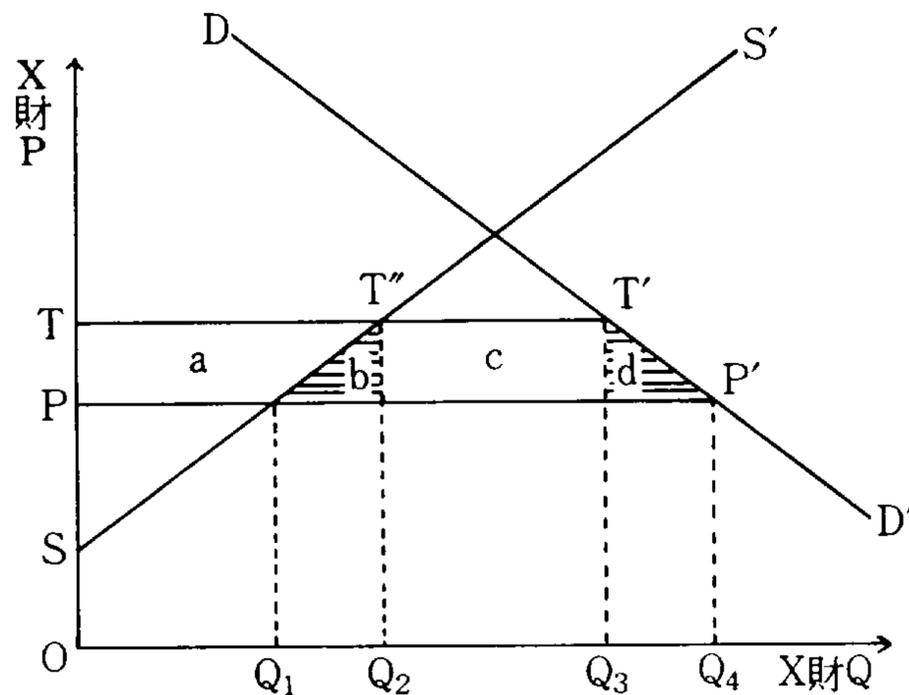
결성되면 수요의 價格彈力性이 零이 아닌 한 消費는 增大된다.³¹⁾ 이때 貿易轉換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自國의 消費增加는 輸入增加를 가져오므로 貿易擴大效果가 발생한다. 이렇게 무역 확대가 일어날 경우 加盟國의 生産비가 自國의 生産비보다 낮다면 自國의 輸入擴大는 加盟國 모두에게 利益을 가져오며 이러한 貿易擴大의 이익을 關稅同盟의 消費效果라 한다.

이러한 消費效果의 分析은 많은 學者들에 의해 전개되었지만 여기서는 H. G. Johnson이 주장한 關稅同盟의 生産效果와 消費效果를 그림을 통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 分析에서는 論議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假定을 설정한다.

- ① 輸入財(X財)와 單一國家(A國)에 미치는 效果만을 分析범위로 한다.
- ② A國內 X財 供給曲線과 需要曲線이 각각 SS' 및 DD'라 표시되고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 ③ B國(同盟國)의 X財 供給曲線(PP')은 無限彈力的이라고 假定한다.

〈그림 1〉 貿易創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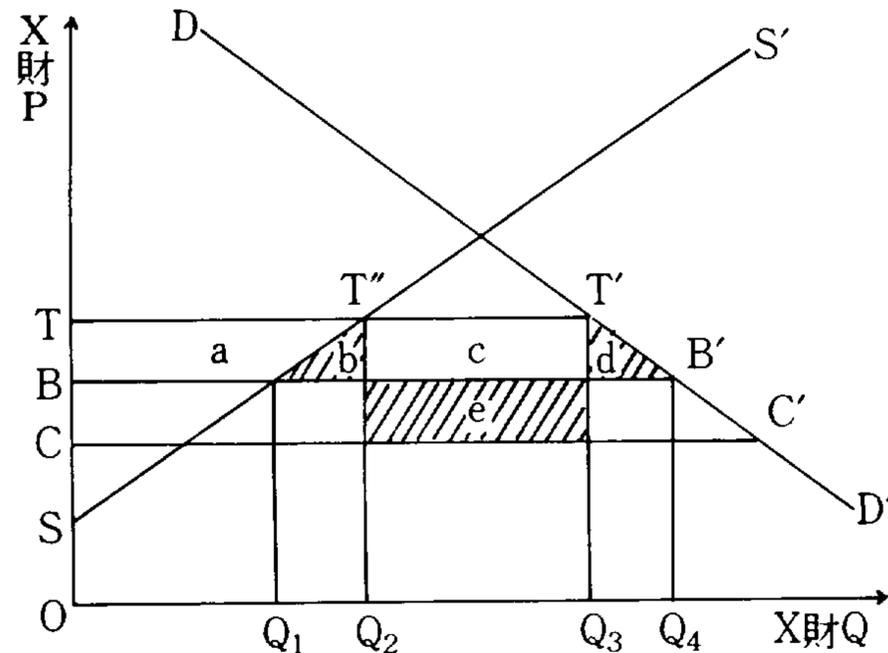
그림(1)에서 A國이 부과하는 關稅를 B國의 供給曲線에다 첨가시키면 TT'선이 된다. 관세 동맹을 결성하기 전에 A國은 국내에서 OQ_2 를 生産하고 OQ_3 를 消費함으로써 그 不足分인 Q_2Q_3 만큼을 B國으로부터 수입했다. 그러나 兩國이 관세를 철폐하면 이 나라의 生産은 OQ_1 로 減少하고 消費는 OQ_4 로 增加하여 輸入은 Q_1Q_4 로 증가하게 되고 A國의 關稅收入은 없어진다.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A國의 소비자는 消費者剩餘가 증가함으로써 사각형 abcd 만큼의 利益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A國이 얻게 되는 純利益은 아니다. abcd중 a는 關稅同盟結成前 生産자잉여의 감소분이고 c는 政府收入의 감소분에 해당하므로 A國이 얻게 되는 純利益은 두 삼각형(Δb 와 Δd)의 합이다. 여기서 Δb 는 輸入에 의해 대체된 A國 國內生産의 實質費用의 절약분을 나타내며 이것이 Viner가 지적한 貿易創出의 生産效果이다. 다음으로 Δd 는 消費

31) 關稅가 철폐되므로 輸入財의 國內價格이 下落한다. 이러한 價格의 下落이 消費의 증가를 야기시킨다.

者剩餘의 純增加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Viner가 무시한 消費效果이다. 결론적으로 貿易創出로부터 얻는 純利益의 크기는 다음의 3가지 變數, 즉 A國의 최초의 관세율의 크기와, 同盟結成前 生産點(T'')에서의 A國의 國內供給彈力성과, 消費點(T')에서의 A國의 國內需要彈力성의 크기에 달려 있다.

그림 2 貿易轉換



그리고 貿易轉換의 경우는 그림(2)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分析에서는 論議의 편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假定을 설정한다.

①輸入材(X財)와 單一國家(A國)에 미치는 效果만을 分析범위로 한다.

②A國內 X財 供給曲線과 需要曲線이 각각 SS' 및 DD'라 표시되고 고정되어 있다.

③B國(同盟國)과 C國(最低生産費 供給源)의 X財 供給曲線(각각 BB' 및 CC')은 無限彈力的이라고 假定한다.

A國은 관세동맹이 結成되기 전에는 相對적으로 더 싸게 C國으로부터 X財를 수입하고 있었으나, 동맹결성후에는 C國보다 더 비싸게 同盟國(B國)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同盟結成前 A國은 OQ₂를 國內에서 生産하고, OQ₃를 消費함으로써 Q₂Q₃만큼을 C國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으므로 A國의 關稅收入은 c+e였다. 그러나 동맹결성후 관세를 철폐하여 A國 國內生産은 OQ₁으로 감소하고 消費는 OQ₄로 증가함으로써 輸入은 Q₁Q₄로 증가하며 A國의 關稅收入은 없어지게 된다. 한편, A國의 消費者剩餘는 abcd만큼 증가하게 되고, 生産者剩餘는 a만큼 감소하며, 關稅收入은 c만큼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消費者剩餘의 增加分(abcd)에서 生産者剩餘의 減少分(a)과 첫번째 關稅收入의 減少分(c)의 합을 빼면 2개의 빗금친 삼각형이 남게 되는데, 이 2개의 삼각형의 합과 두번째 關稅收入의 減少分(e)을 비교하여 b+d>e이면 經濟的 純利益이 발생하고, b+d<e 이면 經濟的 純損失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Δb 는 生産利益을, Δd 는 消費利益을 각각 나타내며, $\square e$ 는 최초의 輸入量 Q₂Q₃를 최저生産비 供給源인 C國으로부터 生産費가 높은 供給源인 B國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純損失을 나타내고 이것이 Viner가 지적한 貿易轉換의 不利한 效果이다.

결국 世界의 厚生增大條件은 b+d를 크게 하고 e를 작게 하면 된다. 이러한 條件을 충족시

키기 위해서는 ①初期의 關稅率이 높을수록 좋다. ②同盟國인 B國과 非同盟國인 C國의 生産費의 差가 작을수록 좋다.³²⁾ ③A國의 需要 및 供給彈力性이 클수록 厚生效果는 더 增大된다고 H. G. Johnson은 주장한 바 있다.³³⁾

(b) 關稅同盟의 動態的 分析

經濟統合의 動態的 分析은 T. Scitovsky나 J. F. Deniau등이 정리한 大市場理論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이들은 1957년 Rome조약³⁴⁾ 成立을 계기로 유럽시장에서 기대될 수 있는 經濟的 利益은 주로 市場擴大에 의한 競爭促進과 市場 및 生産의 動態的 擴散過程에서 기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이들의 理論을 大市場理論이라 한다.

T. Scitovsky는 西유럽의 國別로 분할된 市場은 狹小하고 企業間에 人的 紐帶가 緊密하기 때문에 능률적인 競爭關係의 發展이 저해되어 왔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들 國家들은 小規模 生産, 獨占 및 카르텔에 의한 獨占價格, 高利潤이라는 惡循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小市場, 高利潤率, 高價格, 低資本回轉率의 惡循環을 단절시키는 방법을 經濟統合에 의해서 競爭을 激化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⁵⁾ 競爭激化를 통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려면 종래의 小規模生産을 지양하고 大規模生産을 실현해야 한다. 大規模生産의 실현은 域內 聯關産業의 生産費條件을 개선시키는 外部經濟를 가져온다. 즉 시장확대는 競爭激化를 가져오고 大規模生産方式을 초래하여 결국 가격을 下落시키며 이는 또다시 市場을 확대하고 競爭을 한층 더 激化시키는 動態的 效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J. F. Deniau는 大市場의 利益을 技術的 利益과 經濟的 利益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³⁶⁾

먼저, 大市場의 技術的 利益은 大規模生産과 規格화된 商品生産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機械와 施設의 完全利用이 확보된다. 또 大規模生産은 生産의 直接費用의 減少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각종의 間接費用³⁷⁾의 減少를 가져온다. 즉 협소한 市場은 生産 및 販賣의 近代의 可能性을 完全히 이용할 수 없게 되며, 반면에 광역의 市場은 調査, 生産性, 生産費節減, 消費增大 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만큼 有利하다는 것이다.

32) 그림(2)에서 BB'線과 CC'線이 가까울수록 좋다.

33) H. G. Johnson,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4).

34) ECSC가맹 6개국인 1957년 3월 체결한 유럽經濟共同體(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를 설립하는 條約.

35) T. Scitovsky, *Economic Theory and Western European Integration*,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58), pp. 17~51.

36) J. F. Deniau, *Le Marché Commun, Que sais je?*, No. 778, P. U. F., Paris, 1977, pp. 11~15(孫炳海, 前掲書, pp. 173~176에서 再引用)

37) 間接費用에는 販賣費, 廣告費, 調査研究費 등이 포함된다.

大市場의 經濟的 利益은 技術的 利益을 실현하는 수단 내지 必要條件이라고 한다. 즉 大市場은 競爭을 激化시키므로 非效率的인 生産者를 도태시키고 技術進歩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生産性的의 向上→商品價格의 引上→實質所得의 增大→投資增大의 過程을 통하여 競爭을 더욱 激化시킴으로써 大市場의 利益이 累積적으로 擴大된다는 것이다. 즉 大市場內에서는 재화뿐만 아니라 源資材, 勞動力, 資本의 自由移動이 보장되며, 地域間·産業間 經濟活動의 配分이 효율적으로 配해져 그만큼 經濟적 능률이 향상되는 것이다.

한편, 關稅同盟의 動態的 效果에 대한 一般的 考察은 B. Balassa에 의해서 시도된바 있다.³⁸⁾ 관세동맹의 動態的 效果라 함은 傳統的 統合理論에서는 不變으로 假定되었던 技術變化, 生産要素利用의 효율성 및 要素供給量 등이 關稅同盟에 따른 市場의 확대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動態的 諸效果에는 規模의 經濟, 競爭의 激化, 技術發展의 加速化, 不確實性的의 減少, 投資促進, 非同盟國에 대한 影響 등이 있다.

38) B. Balassa, op. cit., pp. 101~188.

Ⅲ.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 理論

前章에서 살펴 본 經濟統合 理論은 주로 市場메카니즘이 잘 作用하는 유럽工業國에 있어서의 統合을 研究對象으로 發展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유럽工業國과는 經濟發展段階에서나 經濟 및 貿易構造面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을 이들 理論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産業構造와 發展段階가 비슷한 유럽諸國간의 統合에서는 貿易創出의 소지가 크게 기대되는 반면 工業化의 정도가 낮고 一次產品 수출의존도가 큰 低開發 地域에서는 그것이 크게 기대될 수 없는 限界가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에 있어서는 종래의 先進地域의 統合理論과는 다른 새로운 理論들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졌고 이러한 開發途上國의 特性을 반영하는 低開發地域 高유의 統合理論들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經濟統合理論들이 先進地域의 統合理論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은 先進國간의 經濟統合은 資源配分の 효율성에 입각한 貿易創出效果와 貿易轉換效果가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開發途上國간의 統合理論은 統合이 工業化를 통한 經濟發展에 미치는 效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 있다.

1. 工業化政策과 經濟統合의 필요성

오늘날 低開發地域이라 함은 첫째, 生産 및 貿易構造가 이미 工業中心으로 재편성되어 있는 이른바 新興工業國(NICs) 둘째, 工業生産力은 어느정도 발전해 있으나 對外輸出은 아직도 一次產品 輸出構造를 유지해 오고 있는 국가 셋째, 生産과 輸出構造가 여전히 一次產品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는 後進開發途上國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新興工業國 혹은 中進國의 경우는 低開發地域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오늘날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은 그 대부분이 60년대 以後 결성되기 시작했던 만큼 60년대 以後 中南美를 위시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이 가속화 될 수 있었던 時代的 背景을 살펴보면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³⁹⁾

첫째, 20세기 이후 先進諸國의 技術進步와 産業構造의 變化로 인해 低開發地域이 생산하는 一次產品에 대한 需要增加率이 점차 감소하였고 그 결과 많은 低開發諸國은 成長의 動因을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國際分業關係 속에서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둘째, 2차대전 이후 政治的 獨立과 經濟的 自立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低開發諸國은 一次產品 供給源으로서 國際分業體制에 참여하는데 따르는 不利益性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

39) 孫炳海, 前掲書, p. 182.

며, 그리하여 經濟的 民族主義에 입각한 工業中心의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세째, 經濟開發計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經濟發展에 대한 隘路가 物的資本의 부족뿐만 아니라 工業部門에 대한 投資誘因 및 投資能力의 부족에도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동시에 國內市場의 制約要因 등으로 인해 輸入代替型 工業化政策에도 한계가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로 인해 많은 低開發地域에서는 工業化政策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工業化를 추진하는 방식도 輸入代替型 戰略에서 輸出指向型 戰略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經濟開發에 대한 자각과 그 開發方式의 轉換은 一國領域에 국한된 工業化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工業化政策을 相互支援하고 工業化에 필요한 시장확대 방법으로서 經濟統合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P. G. Elkan에 의하면 低開發國으로부터 先進國으로 逆流效果(back wash effect)가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는 低開發國이 종래의 一次產品 輸出에서 工產品輸出로 特化方向을 轉換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⁴⁰⁾ 이때 工業優位論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⁴¹⁾ 첫째, 一次產品과 工產品間의 輸出은 所得彈力性이 相違하여 교역조건이 一次產品에 있어 장기적으로 惡化되는 결과 거기에 추가적 要素를 투입하는 것은 輸出國의 限界收入을 減감시킨다. 둘째, 一次產品에 있어서는 附加的 資本, 勞動, 單位當의 收穫이 減감한다. 이에 대하여 工業生産에 있어서는 規模에 대한 收穫遞增, 技術進步의 急速, 강한 市場浸透力, 높은 資本形成率 및 熟練形成率 등에 의해서 投資 한 單位當의 限界的 成長貢獻力이 一次產品의 경우보다 크다. 여기에 低開發國의 經濟發展이 工業化가 基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低開發國에서는 대부분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여 能率的인 工業生産을 가능케 할 정도의 큰 國內市場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低開發國의 輸入代替的 工業化 政策은 저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低開發國이 工業化를 靑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市場規模의 擴大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市場擴大方法으로 등장한 것이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이다. 開發途上國의 工業化發展에 대한 관점으로 부터 經濟統合의 有効성을 논증한 예는 Hicks와 Nurkse의 論議에서 볼 수 있다.

J. R. Hicks는 經濟發展에 있어 資本蓄積의 意義에 착안하여, 주어진 貯蓄을 能률적으로 投資로 轉換하는 能力과 관련하여 經濟統合의 필요성을 論證하였다.⁴²⁾

Hicks에 의하면 주어진 貯蓄을 能率的으로 投資로 轉換하는 能力은 한 나라가 保存하는 自然資源의 다양성과 한 나라의 市場規模에 의존하는데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後者이며 보다

40) P. G. Elkan, "How to Beat Backwash: The Case for Customs Drawback Unions", *Economic Journal*, March 1965, pp. 44~60.

41) 李英勳, 太平洋地域 經濟共同體 形成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4, p. 56.

42) J. R. Hick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Setting", *Essays in World Economics*, 1959.

우월한 投資集約的인 技術을 채용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보다 生産的인 投資機會는 궁극적으로 產出高를 吸收할 수 있는 市場規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輸出指向的인 工業化를 위한 初步的인 단계로서 市場이 狹小한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한편 R. Nurkse는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方向으로 첫째, 一次產品 輸出을 통한 發展 둘째, 工產品 輸出을 통한 發展 셋째, 國內市場을 대상으로 하는 工業化를 통한 發展 등 세 가지를 들면서 그중 세번째 방식이 오늘날 開發途上國 發展의 初步段階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 國內市場對象의 工業化와 市場規模에 관련하여 그는 均衡成長理論(theory of balanced growth)를 전개하였다.⁴³⁾ 그는 이에 대한 論爭過程에서 理論的인 領域을 一國單位에서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開發途上國 經濟統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Hicks나 Nurkse는 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 내지 工業化를 重視하면서 이를 달성하는 手段으로 經濟統合의 有效性을 論議하고 있다. 經濟統合은 市場規模를 확대시키고 工業化의 基礎條件의 整備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은 그 자체속에 輸入代替的인 工業化政策과 輸出指向的인 工業化政策이라는 두가지 性格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즉 經濟統合은 市場規模의 확대를 통하여 工業化를 촉진시키고, 域外 先進國으로부터 輸入하던 工產品의 域內生産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統合體 全體로서의 輸入代替的인 工業化政策을 指向하는 것이다. 또한 統合體를 構成하는 各國의 觀點에서 보면 각국이 比較優位商品에 特化하고 이것을 域內諸國에 輸出한다는 의미에서 統合體內部에서의 輸出指向的인 工業化를 指向하는 것이기도 하다.

2. 經濟統合의 形成原理에 관한 諸理論

(1) 經濟統合 形成原理에 관한 諸 論議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은 統合地域內에서 經濟發展過程을 상호 보완하고 生産 및 貿易構造를 변화·개선시키고자 하는데 보다 큰 目的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開發途上地域의 經濟統合에 관한 많은 理論들은 주로 이와같은 視角에서 分析·整理되어 왔으며, 실제 그러한 分析視角을 통해 開發途上地域의 特殊性和 經濟統合과의 關係를 규명하고자 하는 諸論議들이 Cooper, Massell, Linder, Dell, Kitamura 등 많은 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43)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3, pp. 4~31.

(a) Cooper-Massell-Johnson의 견해

C. A. Cooper와 B. F. Massell은 工業生産의 증진 수단으로서 相互間 經濟統合의 形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貿易創出에 의한 所得増大를 좋게 여기고 貿易轉換을 통한 所得減少를 나쁘게 여겼던 傳統的 經濟統合理論에 반대하여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工業化를 위해 貿易轉換에 따른 어느 정도의 所得減少는 감수할 수 있을 만큼 工業化가 값진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것이 經濟統合이 選好되는 가장 큰 이유라 하였다.⁴⁴⁾ 다시말해 工業生産의 増大는 雇傭과 所得의 増大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厚生을 증진시키는 效率的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工業生産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經濟統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H. G. Johnson의 工業生産選好說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Johnson의 工業生産選好說이란 저렴한 國際價格으로 얻을 수 있는 個人消費의 效用을 희생해서라도 政府의 保護措置에 의해 工業生産과 雇傭을 國際的 自由競争의 경우보다 더 크게 확대하고자 하는 工業生産에 대한 集團的 選好를 의미한다.⁴⁵⁾ Johnson, Cooper 및 Massell등에 의하면 工業生産物에 대한 集團的 選好⁴⁶⁾가 작용할 때 關稅同盟이 선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工業生産에 대한 社會的 選好 내지 集團的 選好가 있을 경우 當該國은 無差別的 關稅引下를 통한 自由貿易에의 접근보다 關稅同盟과 같은 差別的 關稅引下政策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b) S. Dell의 集團的 保護를 위한 輸入代替論

Dell은 라틴아메리카의 市場統合을 論議하면서 保護의 범위를 확대하고 保護의 效率을 높이기 위해 經濟統合이 추구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⁴⁷⁾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輸入代替戰略은 그 輸入代替의 영역을 一國規模에서 地域規模로 확대시킴으로서 그 政策의 수행에 있어 效率性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一國規模에서 地域規模로 輸入代替의 영역을 擴大시키기 위해서는 域內貿易의 自由化와 域外 貿易差別化를 위한 經濟統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經濟統合은 廣域市場으로의 保護的 接近 내지는 集團的 保護의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44) C. A. Cooper & B. F. Massell, "Toward a General Theory of Customs Un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1965.

45) H. G. Johnson, op. cit., 1965.

46) 工業生産에 대한 選好는 個人的 消費厚生보다는 雇傭増大, 國民所得増大와 같은 社會的 厚生増大를 위해 생겨나는 것이므로 그 選好는 個別的選好가 아니라 社會全般에 걸쳐 일어나는 集團的選好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47) S. Dell, *A Latin American Common Market*, (London : Oxford Univ. Press, 1966), p. 17.

이렇게 開發途上地域內에서 保護된 市場의 범위가 擴大되면 각 加盟國은 規模의 經濟와 特化의 利益을 추구할 수 있는 機會를 넓히게 되며, 이것은 기존 產業의 生産性を 높이고 資本財 產業과 中間財產業의 發展에도 기여하게 되므로 당해 地域 全體의 發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 S. B. Linder의 外換節約理論

Linder는 開發途上地域의 경우 效率적인 外換節約政策의 수행을 위해 經濟統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⁴⁸⁾ 開發途上國의 경우 產業 및 貿易構造上的 특성으로 인해 輸出能力에는 한계가 있고 開發計劃에 필요한 資本財輸入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外換不足狀態에 놓여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開發途上國들이 經濟統合을 形成하여 域內市場을 擴大하고 域外 差別化政策을 도입한다면 加盟國 가운데 일부국가가 消費財 工產品을 중심으로 유리한 輸入代替品을 生産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開發途上國들은 종전까지 先進國에서 輸入해 왔던 非投入輸入⁴⁹⁾을 줄일 수 있게 되어 輸入代替가 能率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統合體 全體로 볼때 非投入輸入이 줄어든 만큼 先進國으로 支拂되던 外換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절약된 外換을 投入輸入에 사용한다면 그만큼 稀少한 外換을 效率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工業生産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Linder에 의하면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에 의해 先進國으로 부터의 非投入輸入을 代替하는 과정에서 貿易轉換效果가 發生하더라도 이러한 貿易轉換은 輸入代替를 추구하는 貿易政策上的 주요 목표를 實現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稀少한 外換을 投入輸入으로 集中시킬 수 있게 하므로 오히려 統合으로 인한 肯定的 效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關稅同盟理論의 開發途上地域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면서 開發途上地域 고유의 統合效果를 分析한 R. F. Mikesell⁵⁰⁾이나 H. Kitamura⁵¹⁾ R. Prebisch⁵²⁾ 등에 의해서도 이론적 접

48) S. B. Linder, op. cit., 1966, ch. III.

49) 李英勳, 前揭書, p. 58.

여기서 非投入輸入이란 低開發國의 經濟發展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輸入品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投入輸入은 經濟發展에 꼭 필요한 財貨로서 生産能力의 完全利用, 維持 및 成長에 각각 해당되는 操業輸入, 再投資輸入, 擴張輸入으로 구성된다.

50) R. F. Mikesell, "The Theory of Common Markets and Developing Countries", Ch.9, in R. F. Harrod and D. C. Hague(eds.), *International Trade Theory in a Developing World*, Macmillan, 1963, pp. 205~229.

51) H. Kitamura, "Economic Theory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Undeveloped Regions", in M. S. Wionszer(ed.), *Latin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1966.

52) R. Prebisch, "El Mercado Común Latino Americano", BNCE, *La Integración Económica Latino Americana*, Mexico, BNCE, 1963. (孫炳海, 前揭書, p. 81에서 再引用)

근이 시도되어 왔으나 그 내용은 주로 市場擴大로 인한 規模의 經濟, 特化機會 創出, 保護의 效率性 및 工業化政策의 效率的 수행을 위해 經濟統合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經濟統合의 構成理論

開發途上國間の 經濟統合 構成原理는 대략 두가지 接近方法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傳統的인 貿易創出 및 貿易轉換效果의 分析方法을 그대로 開發途上國間の 經濟統合에 적용하여 그것에 의해서 發生하는 經濟的 厚生의 變化를 규명하는 것이고(否定的 結論의 도출) 다른 하나는 開發途上國間の 經濟統合이 가져오는 貿易轉換效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거기서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의 독특한 構成原理를 發見하려는 것이다.(肯定的 結論의 도출)

(a) 經濟統合에 관한 否定的 接近方法

G. M. Meier는 統合體 構成諸國이 統合 이전에 서로 고립된 狀態로 있었던 경우 域內關稅의 撤廢는 분명히 貿易利益의 증대를 가져오나 諸國이 고립되어 있지 않고, 이미 大規模의 貿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貿易利益을 증대시키진 않는다는 것을 貿易創出效果 외 에 貿易轉換效果가 存在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하였으며, 貿易創出效果가 크게 되는 條件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⁵³⁾ 첫째 각 加盟國이 同盟結成 이전에 다른 加盟國 商品에 부과하고 있던 關稅率이 높은경우 둘째, 많은 加盟國이 同盟結成 이전에 同種商品을 生産하고 있던 경우 셋째, 域外輸入에 대한 平均關稅水準이 同盟結成 이전의 關稅水準에 비하여 낮은 경우 넷째, 加盟國의 生産物이 域外 輸入品과 競爭程度가 적은 경우에 貿易創出效果가 크게 된다는 것이다.

R. L. Allen은 전통적인 關稅同盟理論의 관점에서 보아 低開發國의 經濟統合이 域外로 부터 그동안 輸入되었던 生産物에 대하여 커다란 貿易轉換效果를 가져오는 반면, 統合諸國이 域內에서 完全自由貿易을 추구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충분한 貿易創出效果를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⁵⁴⁾ 이와같이 地域全體로서의 輸入代替로 부터 貿易轉換은 반드시 발생하고 域內에서 貿易創出의 여지는 작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 統合은 資源配分을 誤導시킬 가능성이 높다.

R. F. Harrod도 Allen과 같은 견해를 갖는다. 그는 아시아의 開發途上地域에 着眼하여 거기에서 대부분의 生産이 自然資源賦存의 樣相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製造工業은 그 初期段階에

53) G. M. Meier,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1963.

54) R. L. Allen, "Integration in Less Developed Areas", *Kyklos*, Vol. XIV, Fasc. 3, 1961.

있으며, 따라서 域内の 高費用의 域內工業이 소멸되기가 어려워 貿易創出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러나 域外の 低費用供給源을 域内の 高費用供給源으로 代替되는 貿易轉換의 여지는 크므로 이것은 非經濟的이라고 하였다.⁵⁵⁾

이상과 같은 견해에 의하면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의 貿易創出效果가 작고 반면에 域外諸國과 관련하여 貿易轉換效果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면 그 綜合效果는 負(-)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b) 經濟統合에 관한 肯定的 接近方法

R. S. Bhamri는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에 대한 否定的 見解에 다음과 같은 상반된 見解를 제시하였다.⁵⁶⁾ 그는 統合에 의한 貿易轉換이 두가지 점에서 有利하다고 한다. 첫째, 2個國에서 工產品 市場規模의 확대를 통한 貿易增大는 規模의 經濟가 중요한 工業에서 費用節減에 도움이 된다. 둘째, 地域全體로 볼 때 보다 廣域에서의 輸入代替는 資本財와 原材料의 輸入에 대한 外換支出比率을 보다 크게 하고 投資率과 經濟成長率을 보다 높인다는 것이다.

R. F. Mikesell도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이 不利益을 가져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經濟統合의 動態的인 效果를 중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⁵⁷⁾

經濟統合은 一次產品의 相互貿易을 創出하고, 새로운 域外輸出을 가능케하며 域內貿易의 擴大는 工產品의 競爭力을 강화시켜 준다. 또한 統合 이전에 域外에 輸出하던 전통적인 一次產品에 대해서는 거의 影響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全體로서 對域外輸出은 증가한다. 따라서 經濟統合의 長期的인 效果는 世界貿易을 減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을 변화시킬 뿐이며, 貿易은 더욱 擴大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全般的인 貿易轉換은 存在하지 않고 貿易創出만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H. Kitamura(喜多村 浩) 또한 經濟統合에 대한 판단기준을 貿易패턴의 變化보다도 그것이 統合體 全體 혹은 各加盟國의 經濟成長率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한다.⁵⁸⁾

그에 의하면 單一國家의 輸入代替政策은 自給自足を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特化의 利益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經濟統合은 확대된 市場을 기반으로 하여 各國의 特化利益을 포기하지 않고 對域外關係를 개발하여 資本形成에 필요한 輸入을 증가함으로써 經濟成長率을 加速化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經濟統合이 諸國間의 代替(intercountry

55) R. F. Harrod, "Economic Development and Asian Regional Cooperation", *Pakistan Development Review*, Spring 1962.

56) R. S. Bhamri, "Customs Union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a Internationale*, May 1962.

57) R. F. Mikesell, op. cit., pp. 205~229.

58) H. Kitamura, op. cit., pp. 42~63.

substitution)와 商品間代替(intercommodity substitution)가 중시되며 특히 商品間代替와 관련하여 貿易轉換效果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經濟統合의 效果에 관한 상반된 論議를 요약해 보면 貿易創出效果와 貿易轉換效果를 統合에 의한 靜態的 厚生水準의 變化 측면에서 본다면 統合의 形成 내지 貿易自由化가 域內貿易을 급속히 확대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靜態的 厚生水準은 負(-)의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이 무엇보다도 우선 工業化 내지 經濟發展에 기여한다는 보다 長期的이고 動態的인 觀點에서 보면 經濟統合은 域內에 工業化基盤을 두고 새로운 局面에서의 特화와 貿易機會를 創出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域外로 부터 源資材, 投資材, 資本材 등 投入輸入을 증가시켜 工業化過程을 지탱시켜주는 經濟成長率을 높여 줄 것이며 이에 따라 統合은 全體로서 正(+)의 效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3) 經濟統合의 分業理論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이 그 構成諸國의 經濟發展을 위한 工業化基盤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統合이 全體的으로 正(+)의 效果를 가져온다면 다음으로 統合體 內部에서의 分業理論에 관한 論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加盟諸國의 經濟發展段階의 差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問題와 관련되며 統合體 形成의 成敗 그 自體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다.

R. F. Harrod는 域內 自由貿易이 加盟諸國의 發展을 不均等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域內全體의 發展을 加速化하는 최선의 方法이고 더우기 域內에서 가장 不利한 입장에 있는 國家라도 統合 이전의 狀態보다 최소한의 厚生增大가 있는 한 不均等의 확대는 반드시 나쁘다고 만은 할 수 없다고 한다.⁵⁹⁾ 그러나 統合體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적은 效果가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만족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觀點은 開發途上國의 工業化 問題를 域內全體로서만 파악하고 加盟國 각각의 個別的인 입장을 配慮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M. S. Wionczek는 만약 貿易自由화와 自由放任政策에 기초를 둔 統合體 內部的 統合計劃이 全體 參加國에 互惠性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면 그러한 計劃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⁶⁰⁾ 그에 의하면 互惠性을 ①國際收支 ②全體的 成長 ③工業化 ④經濟發展水準이라는 네 가지 基本的인 局面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自動的인 統合메카니즘에만 맡기지 말고 이를 관리하는 地域的인 統合機構의 設置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機構는 단순히 貿易과 支拂上의 決定을 넘어 投資政策 및 工業化政策의 調整問題 또는 域內 後進國에 대한 支援問題 등을 취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投資計劃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地域開發銀行

59) R. F. Harrod, "Book Review on S. Dell's Trade Block and Common Market", *Economic Journal*, Dec., 1963.

60) M. S. Wionczek, "The Montevideo Treaty and Latin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Banco Nazionale del Lavoro, Quarterly Review*, Rome, June, 1961.

을 設立해야 하고, 投資活動에 대한 共同政策을 펴야 하며, 商品의 特化를 위한 合意機構 및 統合으로 인한 域內 後進國의 損失補償基金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나 G. Haberler는 Wionczek의 地域統合機構의 構想을 開發途上國의 弱體政府機構와 非能率的인 行政能力을 고려할 때 지극히 非現實的인 構想이라고 비판한다.⁶¹⁾

그에 의하면 互惠性에 대한 강렬한 意識은 있어도 이를 理論的으로 뒷받침하는 分業理論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S. B. Linder는 開發途上國間의 發展水準에 극단적인 차이가 存在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理論構成에서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統合體 內部에서 전통적인 自由貿易理論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⁶²⁾ 그에 의하면 自由貿易은 資源의 最適配分과 건설적인 競爭을 가능케 하고 大規模生産의 利益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靜態的 能率의 改善에 의한 利益은 곧 動態的 效率의 改善을 촉진하여 經濟發展을 촉진한다고 하였고 또 그는 貿易轉換效果의 經濟厚生の 有害性을 회피하기 위하여 統合對象範圍가 가급적 큰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經濟發展段階가 다른 開發途上國間에 結成된 統合體 內部에서의 分業原理가 能率原則에 의해서만 劃一的으로 다루어질 수 없으며 또 넓은 領域內에서 發展段階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非現實的이다.

그러면 統合諸國間에 소위 域內 先進國과 域內 後進國이라는 發展水準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統合體의 存續을 보장하려면 어떠한 條件을 붙이거나 혹은 그 結果에 修正을 가하는 分業理論과 처음부터 統合體의 存續可能性을 重視하고 그것을 위하여 統合利益이 각 加盟國에 公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衡平原則에 留意하는 分業理論 등의 두가지 理論體系를 볼 수 있다.

이상에서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發展水準의 差異를 前提로 하는 域內分業에 관한 論議를 살펴 보았다. 하나는 互惠性에 입각한 合意的 分業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資源의 最的配分을 重視하고 比較生産費原理에 基礎를 둔 自由貿易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前者는 地域統合機構의 設置와 合意的 衡平의 特化를 問題로 하는 점에서 計劃原理 내지 衡平原則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後者는 競爭原理를 통하여 靜態的 貿易利益의 極大化를 目標로 한다는 점에서 能率原則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對立關係에 있어서는 前者는 能率原則을 부정하고 衡平原則을 重視하는 결과, 分業의 理論的 바탕이 미약하다는 결함을 갖고 있고 後者는 個個의 加盟國에 대한 衡平原則 특히 域內 後進國에 대한 配慮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能率原則과 衡平原則의 調和問題를 해결해 주는 理論的 根據는 아직 없다. 다만 Bhambri가 제시한 對 域內後進國에 대한 補助金 供與政策과 Cooper-Massell 및 Johnson의 工業生産選好說 등에서 어느 정도의 意味와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구체적

61) G. Haberler, "Further Remarks on the Problems of Integration of Less Development Countries", *Revista Brasileira de Economica*, ano. 20, no. 23, 1963.

62) S. B. Linder, *Trade and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pp. 122~142.

인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앞으로 開發途上國間的 經濟統合研究에서 규명되어야 할 課題이다.

3. 經濟統合의 期待效果

開發途上地域에 있어서 經濟統合은 靜態的 關稅同盟理論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많은 開發途上國들의 國內生産은 天然資源의 賦存狀態와 自然條件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産業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工業化가 어느정도 진전된 開發途上國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製造業部門에서는 技術, 資本, 經營能力上的 劣位로 인하여 先進國보다는 더 높은 生産費가 요구되는 生産構造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開發途上國 相互間에 經濟統合을 結成하여 域外關稅를 철폐하고 對 域外 差別化措置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貿易轉換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開發途上國의 경우 對外貿易이 주로 先進工業國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自國의 총지출 중 域外先進國으로 돌려지는 비중이 크므로 經濟統合의 消費效果를 강조한 Lipsey類⁶³⁾의 학자들의 주장도 큰 의의를 가질 수 없다.

이렇듯 開發途上地域의 경우 靜態的 側面에서는 生産面에서든 消費面에서든 經濟統合으로 인한 긍정적인 效果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經濟構造上的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미 앞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市場擴大에 수반되는 動態的 效果의 경우에도 大市場理論에서 지칭하는 바의 기존산업간의 競爭促進으로 인한 技術革新과 規模의 經濟보다는 市場擴大를 통한 工業基盤의 조성, 效率的인 輸入代替 및 貿易構造의 改善을 추구한다는 開發戰略上的 期待效果가 더 크게 평가되는 것이다. 開發途上國間的 經濟統合이 결성될 경우 그로 인한 開發戰略上的 期待效果는 다음과 같다.⁶⁴⁾

첫째, 經濟統合은 加盟國 상호간에 國內市場을 開放하는 것이므로 협소한 國內의 工產品市場을 統合體規模로 확대시키며 加盟國間的 貿易을 촉진하게 된다. 市場擴大를 통한 域內 貿易의 增大는 大規模生産을 가능하게 하며 生産費 引下를 가져오므로 開發途上國의 工業競爭力을 提高시킨다.

둘째, 工業部門에서의 競爭力向上은 對 域外 輸出機會를 확대시킴으로써 開發途上國의 貿易構造를 개선시킨다. 또한 域內市場의 확대는 輸出과 生産을 촉진하여 一國 혹은 統合體全體에 걸쳐 投資機會를 확대시키며 成長을 촉진하게 되는 일련의 動態的 과급효과를 유도하게 된다.

63) R. G. Lipsey, op. cit.

64) 孫炳海, “低開發地域의 經濟統合理論에 관한 再吟味”, 慶北大學校經商大學論集, 第15號, 1987, p.

세째, 經濟統合으로 인한 市場擴大는 합리적인 輸入代替政策의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一國單位에서 실시하는 輸入代替政策은 自給自足を 기대하는 것이 고작이며 特化에 의한 貿易利益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 반면 複數國間에 형성된 統合體規模의 輸入代替政策은 地域全體로 볼 때 自給自足の 가능성을 높이므로 對 域外 輸入代替가 그만큼 용이하게 되며 域內에서는 比較優位에 근거를 둔 自由貿易의 실현으로 特化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네째, 經濟統合에 의한 地域規模의 輸入代替政策은 非投入材의 域內 自給度を 높이므로서 外貨의 節約을 가져오며, 절약된 외환으로 投入輸入의 폭을 넓혀 준다.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經濟統合에 의한 輸入代替政策은 國家間의 代替 뿐만 아니라 商品間의 代替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國家間 代替는 統合에 의한 域內 貿易自由化 및 對 域外 貿易差別化조치로 인해 商品의 供給國이 바뀌는 현상(貿易轉換과 貿易創出)을 의미한다. 商品間 代替는 域內에서는 消費財의 自給化를 꾀하는 반면 域外 先進國으로부터는 消費財輸入을 억제하고 投資財輸入을 촉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섯째, 經濟統合은 各 國家間의 合意에 의한 市場統合을 의미하므로 對 域外 貿易協商 등에서 統合된 地域의 交渉力을 강화하는 등의 經濟外的인 效果를 수반하게 된다. 同時에 域內 諸國間에는 産業補完政策, 地域別 投資配分政策 등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國際間的 産業調整도 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經濟統合은 人爲的 特化戰略의 수립에 도움이 되며 開發途上國으로 하여금 國際分業秩序의 動態的 變化過程에 접근할 수 있는 政策의 실시를 가능하게 해준다.

IV.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의 實際

1. 西유럽의 經濟統合

(1)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成立背景

第二次世界大戰後 IMF 및 GATT 등 國際經濟機構의 창설을 계기로 各國間的 經濟協力이 한층 긴밀하게 되었으며, 植民地들의 獨立에 따른 輸出市場의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先進國들은 經濟發展 段階와 經濟構造가 類似하고 同質적인 國家間에 經濟統合을 結成하여 經濟的 利益의 획득을 꾀하게 되었다. 더욱이 世界市場은 資本主義經濟圈의 市場과 社會主義經濟圈의 市場으로 분리되어 資本主義國家들의 輸出市場은 그만큼 축소되었고, 그 내부에서는 輸出競爭이 치열했기 때문에 일부국가에서는 貿易障壁을 제거하고 각각 自國市場을 開放하여 廣域市場을 結成하는 등 經濟統合을 結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電子工業, 石油化學工業, 原子力産業 등을 중심으로 하는 生産技術의 혁신으로 生産力과 生産規模가 거대화 되었기 때문에 종래 一國의 狹小한 市場만으로써는 技術革新에 의하여 生産된 商品을 도저히 소화시킬 수 없게 되어 規模의 經濟 利點에 따라 大規模市場의 形成이 요청되게 되었고 이러한 時代的 요구가 經濟統合의 結成動機가 되었다.

戰後 유럽地域에 있어서 經濟統合의 契機는 유럽의 經濟復興을 위한 美國의 Marshall Plan의 援助를 效率적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常設調節機構를 設置할 필요성에서 1948년 4월 16일 西獨, 英國, 프랑스등 유럽 17個國이 調印한 유럽經濟協力에 관한 條約에 의거하여 設立된 유럽經濟協力機構(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EC의 發端은 1950년 프랑스 外相 Schuman이 提案한 Schuman plan⁶⁵⁾에서 찾을 수 있다. 이 提案에 英國은 主權의 制約을 꺼려하여 參加하지 않았고, 北유럽과 그 밖의 中立主義 國家는 政治的 統合을 前提한 것이라는 理由로 參加를 拒否하였으므로 결국 1951년 4월 西獨,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個國만이 유럽石炭·鐵鋼共同體(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條約에 調印하였다. 1953년 2월에는 石炭, 鐵鋼石, 屑鐵의 共同市場이 形成되었고, 1954년 8월에는 特殊鋼의 共同市場이 形成되었다.

그 후 1956년 6월에는 ECSC加盟國 外相會議에서 EEC의 結成을 위한 基本方針을 決定하기 에 이르렀으며, 1957년 3월 Rome에서 유럽原子力共同體(EURATOM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와 함께 EEC발족을 위한 條約을 調印하였다. 그리하여 OEEC의 경험을

65) 西獨과 프랑스의 石炭과 鐵鋼의 生産과 販賣를 유럽諸國이 함께 參與하는 最高機關에서 管理하는 內容이다.

토대로 1958년 1월 유럽經濟共同體(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발족을 보게 되었다. 그 10년 후인 1967년 7월에 EEC는 ECSC와 EURATOM을 統合하여 EC로 새출발을 하였고, 1973년 1월에는 英國, 덴마크, 아일랜드 등 3個國을, 1981년에는 그리스, 그리고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加盟國으로 받아들여 現在 12個國의 加盟國을 포함하고 있으며 地理的으로는 지중해에서 北유럽에 이르는 廣域共同市場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1985년 6월에는 1992년 까지 單一市場創設을 위한 계획인 域內市場統合白書を 採擇하였고, 1987년 7월에는 1992년 域內市場統合과 관련하여 單一유럽法(Single European Act)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進展을 보인 EEC의 당초 Rome條約 내용에서 EC統合의 基本原則을 要約하면 첫째, 關稅同盟의 完成 및 商品移動의 自由化 둘째, 勞動, 資本, 서비스移動 및 企業設立의 自由化 셋째, 서비스업 活動의 自由化 및 域內資本移動의 自由化 등이다.

(2) EC의 共同政策

EC는 이상과 같은 自由化原則을 기초로 關稅同盟과 共同市場을 設立하였고 이를 통해 加盟國 相互間의 유대결속을 도모하여 밀도있는 經濟共同體로 발전해 왔다. 한편 Rome條約에서는 加盟國 상호간의 調和있는 발전과 廣域市場圈을 배경으로 한 영속적인 成長을 추구하기 위해 共同體單位의 제반 共同政策의 俱現을 촉구하고 있다. EC의 共同政策으로는 農業政策, 通貨制度, 地域, 貿易, 産業, 運送政策 및 競爭, 社會, 科學技術 및 研究開發, 에너지 政策 등 經濟政策 全般에 걸쳐 광범위하게 共同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정책의 實現을 위해 關係法規 및 稅制의 調和도 아울러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EC가 전개하고 있는 각종 共同政策 중 중요한 몇가지 만을 정리하기로 한다.

(a) 共同農業政策

共同農業政策(Common Agricultural Policy)은 1962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나 初期에는 工業國인 독일과 農業國인 프랑스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해 순조롭지 못했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農業政策의 조정이 유럽統合의 요체임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1962년 1월 14일 農產物 市場機構와 관련된 첫번째 法規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⁶⁶⁾ 첫째, 域內 全地域에 걸쳐 農產物의 자유로운 移動과 共同價格을 보장한다. 둘째, 農產物 구매자로 하여금 域內 生産物 혹은 域外生産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나 域外로부터 구입할 때에는 모든 金融的 이익을 제거하도록 한다. 셋째, 共同政策 수행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會員國間 이를 분담한다.

66) 金世源, EC의 經濟·市場統合, (서울: 韓國經濟新聞社, 1990), p. 67.

한편 1972년 부터는 農業構造改善政策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경지구조의 개선가공 및 유통구조개선, 산악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등이다.

共同農業政策의 주요 目的은 農業生産을 合理化하고 합리적인 農産物價格을 유지함으로써 域內農産物市場의 안정을 꾀하여 農業從事者의 所得增大를 이룩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共同農業政策의 실시내용은 域內農産物의 自由移動, 域內單一市場形成, 單一價格制度, 共同財政政策, 生産業者에 대한 評價支援制度, 對域外差別政策, 通貨補償金(Monetary Compensatory Amounts)의 실시 등이 있다.

현재 總農業生産量의 95%가 共同體 수준에서 관리되는 共同市場에 의존하고 있는 EC의 共同農業政策은 다음과 같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 첫째, 農業生産物의 適正供給保障 둘째, 農業의 現代化 셋째, 農業所得의 增大 넷째, 農産物의 域內貿易 다섯째, 域外地域과의 農産物貿易 그리고 1983년 12월 아테네 頂上會議, 1984년 3월 브뤼셀 頂上會議 등을 거쳐 共同農業政策의 개편안이 유럽 農業長官理事會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보면 價格保障制度의 限界設定 및 既存限界의 擴大, 域內 우유生産의 縮小, 포지티브 補償金の 3段階에 걸친 해체 등을 들 수 있다.

(b) 유럽通貨制度

EEC가 발족된 이후 각 加盟國들은 通貨同盟 내지 共同通貨政策을 위한 協力을 도모하지 않고는 유럽統合에 限界가 있음을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60년대말 프랑貨의 平價切下와 마르크貨의 平價切上을 경험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域內通貨 相互間의 換時勢不安은 EC統合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어 70년대 이후 유럽각국은 經濟通貨同盟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通貨統合의 理論的 背景은 R. A. Mundell類의 最適通貨地域(optimum currency area)⁶⁷⁾에 관한 論議를 시발로 발전해 왔다. 그후 1969년 2월 Barre案이 제안되어 동년 7월 EC 閣僚理事會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1970년 10월 단계적 실현을 위한 보고서인 Wemer案이 EC 理事會에 제출되었다. 1971년 3월 EC 閣僚理事會는 10년간의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經濟 및 通貨同盟案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案은 域內通貨間 交換性(convertibility) 保障, 固定平價制度의 정착과 換率變動의 축소 등에 의해 특정지어지는 하나의 通貨同盟圈을 형성하는데 目標를 두고 있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 70년대 초반부터는 域內 換安定을 目標로 하는 通貨協力이 취해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70년대 중반 스네이크制度 및 共同變動換率制度가 나타났다. 그러나 1973년

67) 最適通貨地域이란 그 地域內 會員國간 最適調整이 固定 平價制度下에서 進行되고 또 域外 地域과의 거래에 있어서 最適調整은 變動換率制度下에 이루어지는 通貨圈을 말한다.

말 1차 石油波動이 일어나면서 유럽 각국의 경제사정은 혼란상태에 빠졌고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實效를 거두지 못하자 1975년 3월 Majolin보고서⁶⁸⁾와 1976년 1월 發表된 Tindemans보고서⁶⁹⁾등을 통해 유럽通貨同盟에 대한 새로운 接近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를 토대로 1978년 7월 Bremen에서 개최된 EC 理事會에서 유럽通貨制度(EMS : European Monetary System)를 1979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다는데 合意를 보게 되었다. EMS는 발족이후 지금까지 10년이 흐르는 동안 EC 域内の 通貨 및 物價安定에 기여한 것으로 評價되며 그 成果로는 EC 通貨로서의 普遍성과 效率性, 換率安定 및 物價安定, ECU(European Currency Unit)의 信用擴大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EMS制度에서는 共同通貨單位로서 ECU를 創出하고, 換率安定制度로서 패리티 그리드制度和 乖離指標制度를 두며 國際收支不均衡해소를 위한 財政支援措置制度를 설치하고 있다.

(c) 共同地域政策

EC의 地域開發政策은 國家間, 地域間의 均衡發展을 꾀한다는 Rome條約의 취지에 따라 EEC발족 당시부터 주요 共同政策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1973년 제1차 加盟國擴大政策 및 1980년과 1986년의 제2차 擴大政策으로 域内の 國家間, 地域間 發展隔差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地域政策은 共同體의 維持·發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政策으로 浮上되었다.

현재 EC規模의 共同地域政策에 의한 주요 開發支援對象地域은 첫째, 農業이 지배적인 地域, 産業構造가 變化하고 있는 地域(斜陽産業地域) 둘째, 構造的 失業이 存在하고 있는 地域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낙후지역의 開發을 支援하기 위해 1975년부터 共同體機構로서 地域開發基金(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을 설립해 두고 있다. 同 基金은 독자적으로 開發事業을 運營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地域開發政策에 의해 支援을 받고 있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資金을 援助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EC에서는 石炭鐵鋼共同體, 유럽投資銀行, 유럽社會基金, 農業指導保證基金 등과 같은 共同體機構를 통해 地域開發政策을 支援하고 있다.

(d) 共同貿易政策

Rome條約 제110~116조에 의하면 過渡期間(1958~69) 동안에는 加盟國들 간의 貿易政策을

68) 1970년대 초반 通貨同盟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원인을 분석하고 당면과제로서 인플레이션, 고용 및 국제수지 조성 등에 있어서 각국간 정책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69) 보다 강력한 유럽統合을 실현하기 위해 市場統合에 더하여 정책통일을 통한 유럽同盟의 추구를 주장하고 있다.

調整·接近시켜 하나의 統一된 政策을 수립함으로써 1970년부터는 원칙적으로 EEC가 加盟國에 대신하여 제3국에 대한 貿易政策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共同貿易政策(Common Commercial Policy)은 共同體 貿易去來에 있어서 加盟國의 經濟主權은 상실되고 共同體만이 배타적으로 權限을 갖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특히 關稅에 대해서는 EEC가 機能을 발휘하기 시작한 1958년부터 共同政策의 수립과 함께 제3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共同體가 獨立的인 機能과 權限을 행사하여 왔다. Dillon 및 Kennedy라운드와 같은 世界貿易協商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이 EC 加盟國은 원칙적으로 單一의 共同貿易政策을 채택해야 하는 반면 加盟國은 독자적으로 하등의 權限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非關稅政策에 있어서는 關稅政策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共同體가 관리하는 하나의 共同政策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意味에서는 과도기간이 20년 경과한 현재까지도 Rome條約에 예정된 일정표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EEC의 共同貿易政策은 關稅·農產物貿易·反덤핑稅 및 相計關稅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그밖의 것은 共同政策의 테두리 내에서 共同管理가 이루어지고 있다.

EC의 對外共同貿易政策의 大綱을 要約해 보면 첫째, 輸出規制의 統一은 제3국에 대한 輸出支援措置의 統一 및 貿易制限措置의 統一 등으로 나타나며, 輸入規制의 統一은 輸入自由化品目的의 統一, 輸入割當制의 統一 및 保護貿易措置의 統一 등으로 행해지고 있다. 둘째, 海外市場에서의 貿易擴大를 위한 共同政策은 주로 對外 通商條約締結에 관한 加盟國間의 共同措置의 形態로 실행되고 있다. 셋째, 農產物 去來規則의 統一은 共同農業政策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農產物의 域內流通은 물론 對外輸出入까지도 國別措置가 아닌 共同體의 統一된 規則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EC의 共同貿易政策 가운데 또 한가지 특기할 것은 地域主義에 입각하여 差別的 特惠貿易協定을 체결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EC의 特惠貿易協定은 共同貿易政策의 一般的 原則에 따라 共同體規模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대상지역별 特惠의 정도와 差別化의 정도는 協定の 형태에 따라 다르다. 이들 協定の 공통점은 協定對象國에 대하여는 EC측이 貿易上의 遇待措置를 취하고 非協定國에 대해서는 差別待遇를 한다는 점이다.

(3) EC의 對外關係

(a) EC와 UN

ECSC, EEC는 각각 파리조약 제93조와 로마조약 제229조에서 유럽共同體가 UN 및 다른 國際專門機關과 유용한 관계를 맺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EEC는 1961년부터 FAO·UNICEF·IMF 및 世界銀行 등과 協力條約을 맺고 있다. 또한

UNCTAD 및 UNESCO에도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967년 부터는 UN 經濟社會諮問會議에 그리고 1974년부터는 總會에도 참가하고 있다.

EC와 GATT 會員國들과의 關係는 共同貿易政策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C는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國際慣行에 의해 사실상 資格을 부여받고 있다. EC는 1957년 Rome條約이 調印되던 해 GATT 總會에 EEC 設立計劃을 發表하였으며 그 후 GATT 테두리내에서 개최된 제5차 世界貿易協商인 딜런 라운드(1960~61)에서 사실상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EC는 케네디 라운드(1964~67) 및 동경 라운드(1975~79)에 참석하여 美國과 함께 協商을 주도하였고 제8차 協商인 우루과이 라운드(1986~90)에 있어서도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다.

(b) 對先進國政策

EC의 對先進國 貿易政策은 총체적으로 IMF-GATT의 無差別原則에 입각하고 있다. EC의 탄생 이후 딜런 라운드·케네디 라운드·동경 라운드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 등 國際貿易 協商이 개최되었는데 共通的인 特徵의 하나는 모두 美國의 제안에 근거하였다는 점이다. 美國은 EC의 등장과 함께 世界貿易協商을 서둘러 왔는데 그 중요한 취지는 西歐諸國의 對美 差別政策을 중화시키는데 있었다.

EC는 Rome條約에서도 명시되었듯이 여건이 허락되고 條件을 갖춘다면 모든 유럽諸國이 加入할 수 있다고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1973년 유럽自由貿易聯合(EFTA)의 핵심 會員國인 英國을 비롯한 3個國이 EC에 가입하게 되자 EC와 나머지 EFTA 會員國간 工產品 貿易에 限定되는 自由貿易協定이 1972년 체결된 뒤 5년간의 過渡期間이 경과한 1977년 7월 完成되었다. 그 후 보완조치를 거친 후 1984년 1월 1일을 기하여 EC와 EFTA간에는 工產物에 대한 關稅가 완전히 撤廢되었고 農業部門에서도 相互協約이 이루어져 數量制限·關稅 등에 관한 規定이 체결되었다.

(c) 社會主義 여러나라와의 關係

소련을 비롯한 COMECON(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國家는 1988년 6월에 들어서야 EC를 公式적으로 承認하였는데 公式承認이 이렇게 늦어진 理由는 우선 EC 設立 당시 EC가 帝國主義的 그리고 經濟的 NATO의 化身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1975년 2월 EC와 COMECON간 貿易協定이 최초로 체결되어 公式적인 접촉이 있는 후 계속 會談이 개최되어 왔다. 또한 EC會員國은 대부분 東유럽諸國과 個別的으로 다양한 形態의 貿易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共同貿易政策의 수립에 따라 그 내용을 調整하고 統一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루마니아는 1980년에 EC와 工產品 貿易에 관한 相互 互惠原則에 合意하였는데 東유럽내 改革의 추진과 함께 앞으로 EC-COMECON간 經濟協力과 貿易擴大를 내용

으로 하는 協商이 활발히 전개될 展望이다.

한편 EC와 中國과의 관계는 예외적으로 中國이 EC를 일찍부터 承認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6년 初 이후 貿易協定の 체결을 위한 協商이 진행되어 1978년 4월 調印하기 까지 이르렀다.

(d) 開發途上國과의 關係

EC는 韓國 및 臺灣을 비롯한 NICs를 제외하고는 開發途上國에 대하여 一般的으로 自由主義的 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EC는 77그룹에 속하는 모든 國家에 대해서 GSP惠擇을 주고 있으며 또한 루마니아나 中國같이 GSP를 요구하는 國家에게도 그 惠擇을 주고 있다. GSP 공여 대상품목에 있어서 EC는 다른 先進國의 경우와는 달리 農產品 및 工產品을 다같이 特惠對象으로 간주하고 있다.

開發途上國에 대한 差別政策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프리카·카리브·太平洋地域內 46個國과 EC간에 1975년 2월 차드의 수도인 로메에서 調印한 로메協定을 들 수 있다. 이 協定은 그후 1979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고 있는데 現在 會員國數는 EC의 12個國과 아프리카·카리브·太平洋地域(ACP地域)의 66個國과 더불어 거의 80個國에 달하고 있다. 로메協定은 EC측이 ACP地域에 대하여 일방적인 特惠나 援助의 提供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EC는 一般特惠制度의 명분 아래서 거의 自由貿易에 가까울 정도로 輸入障壁의 撤廢라는 惠澤을 주고 있으며 단지 일부 農產物에 있어서는 共同政策의 테두리내에서 다소의 制限을 가하고 있다.

또한 EC는 지중해제국과 각종 形態의 協定을 締結하여 연장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協定들이 추구하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國家의 경우 EC 加入이 전제되나 그외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지중해 國家와는 궁극적으로 工產品에 있어서 自由貿易의 설정이 시도되고 있다. 둘째, 지중해 國家의 輸出品中 農產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EC내 農產物과의 경합, 특히 共同體 農產物政策을 고려하여 品目別로 貿易障壁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個別協定이 締結될 수 있다. 셋째, EC와 지중해 國家間의 資本 및 技術協力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勞動을 비롯한 生産要素의 移動을 보다 원활히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EC와 ASEAN(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n Nations)과의 관계는 英國이 EC에 加入함에 따라 그동안 제공되었던 特惠를 상실할 것을 염려한 ASEAN의 몇몇 國家들에 의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77년 11월 구체적인 안건들이 論議된 결과 經濟協力에 관한 條約에 원칙적으로 合意를 봄으로써 1980년 3월 靑島에서 정식으로 締結되었다. 이 經濟·貿易에 관한 協力條約은 5년에 걸쳐서 전통적인 貿易뿐만 아니라 產業·農業·에너지·運送 등에 있어서도 相互協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2. 中南美地域の 經濟統合

(1) 라틴아메리카 自由貿易聯合(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a) 라틴아메리카 自由貿易聯合의 成立背景

中南美諸國은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美洲大陸이 정복된 이래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言語, 歷史, 文化, 政治, 經濟的인 면에서 하나의 單一共同體로 結合될 수 있는 同質性을 가지고 있었다. 2次大戰後 이들 諸國의 國際的 地位가 격상되고 工業化를 기축으로 하는 經濟發展이 추진됨에 따라 經濟統合의 必要性이 現實的인 問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57년 유럽에서 EC가 結成된 것에 자극받아 1961년 發足한 LAFTA는 브라질, 칠레,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르과이 등 7個國이 몬테비데오協定(the Treaty of Montevideo)을 締結함으로써 設立되었으며, 1961년 10월 콜롬비아와 11월 에콰도르가 加入하고, 1965년 11월 베네수엘라 그리고 1967년 볼리비아가 加入함으로써 11個國으로 構成되었다. 統合의 對內外的 事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大恐慌이 끝난 1930년대 이후 輸入代替型工業化政策을 추진하면서 市場狹小로 인한 限界性을 발견하게 되었고 따라서 市場擴大措置가 必要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EC의 對아프리카 特惠貿易關係가 강화되면서 中南美諸國에 대한 유럽의 相對的 差別이 불가피해 지자 中南美諸國間의 상호결속이 중요시 되었다.

셋째, 中南美地域 특히 南部諸國間에는 1950년대 이미 雙務協定에 의한 貿易擴大政策과 濟메카니즘의 확충이 상당히 進行되고 있었다.

이러한 背景에 의해 設立된 LAFTA의 目的은 라틴아메리카 經濟委員會를 통한 라틴아메리카諸國의 經濟協力에서 進一步하여 域內諸國의 貿易障壁을 除去하고 互惠의 原則에 立脚하여 各국의 經濟를 相互補完하고 經濟·社會發展을 도모하여 共同市場을 形成함에 있다.

(b) 統合의 成果와 問題點

LAFTA의 經濟와 貿易을 結合하는 대표적인 統合메카니즘으로는 貿易自由化計劃과 部門別 産業補完協定을 들 수 있다.

貿易自由化計劃이란 加盟國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해 부과되는 關稅 및 課徵金 등의 貿易制限을 점차 폐지하여 域內貿易을 自由化하는 措置로서 그 수단으로는 國別自由化品目(國別리스트)과 域內諸國 共通의 自由化品目(共通리스트) 등이 있다. 産業補完協定(Industrial Complementation Agreement)은 域內産業의 협조적 發展과 관련산업의 國際的 結合을 꾀하기 위해 當該産業에 소요되는 部品 및 製品에 대해서는 關稅 및 기타의 輸入制限措置를 輕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統合메카니즘을 통해 LEFTA는 中南美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統合體로 존립해 왔으며 1980년 말을 기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中南美諸國 相互間의 貿易增大 및 工業化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LEFTA가 지속되었던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域內外貿易成長率을 비교해 보면 이 기간동안 對域外 輸出成長率은 年平均 12.3%임에 비해 域內 輸出成長率은 16%로 나타난다. 그 결과 域內貿易比重은 輸出의 경우 LEFTA結成 초기 7.6%수준에서 1970년 10.2%로 그리고 1980년에는 13.7%로 계속 增大되어 왔다. 輸入의 경우에도 1961년 약 8% 수준에서 1970년 11.2%, 1980년 11.9%로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域內貿易의 확대는 1960년대 초반 國別리스트의 확대에 의한 關稅讓許와 70년대 중반 이후의 産業補完協定에 의한 域內貿易促進效果에 의한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域內貿易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의 3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이들 3국의 域內輸出 比重이 1961년 46%에서 1980년에는 약 60%로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經濟發展隔差에 따른 域內貿易의 偏重과 不均衡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LAFTA結成 이후 域內貿易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는 工產品貿易의 증대현상이 있다. LAFTA結成 初期에는 域內貿易의 약 75%가 農產品 내지 非工產品이던 것이 1980년에 와서는 域內貿易의 50% 이상이 工產品貿易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構造의 變化는 域內諸國의 工業化進展과 아울러 工業補完協定에 의한 關稅讓許로 제조업제품의 域內輸出이 擴大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域內 工產品貿易이 域內先進國에 의해 주로 지배되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統合利益의 均霑과 均衡成長은 오히려 악화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域內諸國間의 經濟發展隔差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나머지 域內貿易의 自由化폭이 增大함에 따라 域內先進國과 域內後進國間의 貿易不均衡 및 工業成長隔差는 더욱 심화되어 갔던 것이다.

(2) 라틴아메리카 統合聯合(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a) 라틴아메리카 統合聯合의 成立背景

LAFTA가 그 初期段階에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후반부터는 關稅讓許가 정체되기 시작했고 70년대 이후부터는 域內先後進國間의 發展隔差가 심화되어 내부결속력이 약화되며 1980년을 고비로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LAFTA를 계승하여 1981년 LAIA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LAFTA諸國들은 1979년의 年次總會에서부터 새로운 統合機構의 수립을 위한 협상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새로운 機構의 具體案이 1980년 7월 加盟國의 外相會議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同案은 같은 해 8월 몬테비데오에서 LAFTA 11個 會員國에 의해 調印되었다.

(b) 라틴아메리카 統合聯合의 機能 및 內容

LAIA는 그 組織이나 機能面에서 LAFTA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LAFTA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關稅讓許制度 및 그 實績의 토대 위에서 統合體의 運營방식만을 수정하였다.

LAIA와 LAFTA의 運營방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LAIA는 LAFTA와 달리 貿易自由化를 위한 목표달성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LAFTA에서도 域內低開發國에 대한 遇待措置가 있었으나 LAIA에서는 發展段階를 보다 세분하여 域內先進國, 中進國, 기타 諸國으로 구성된 低開發國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發展隔差에 상응하는 特惠供與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LAFTA에서는 해당품목에 한하여 特惠供與가 이루어져 왔으나 LAIA에서는 全品目에 걸쳐 교섭당사국간에 關稅讓許와 貿易制限의 緩和를 약속하는 部分協定(partial agreement)에 의해 관세인하조치가 취해진다.

현재 LAIA內에서 추진되고 있는 域內貿易自由化를 위한 交渉內容을 살펴보면 域內 共通關稅制度의 도입, 域內低開發國에 대한 特惠的 市場開放協定, 國別 리스트 및 特別리스트의 再交渉을 위한 部分協定, 貿易部分協定, 經濟補完部分協定 등이 있다.

넷째, LAIA에서의 모든 協定은 雙務主義方式이 아니라 多角主義方式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국가간에 맺어진 地域協定 및 部分協定은 다른 제3의 加盟國에 대해서도 開放的이다.

다섯째, LAIA에서는 LAFTA에서 유지해 왔던 金融協力關係를 기반으로 하여 域內 多角決濟制度를 發展시키고 있다.

3. 아프리카地域의 經濟統合

(1) 아프리카地域 經濟統合의 成立背景

아프리카大陸은 中南美地域과는 달리 政治, 文化的 背景이 서로 다른 상이한 種族으로 구성된 地域이다. 經濟的으로는 국내 자본축적과 산업시설이 빈약하고 技術水準이 낮으며 一次產品의 生産과 輸出에 依存도가 커서 國際價格變動과 가뭄, 洪水 등의 天災로 인한 不安要因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補完하고 近代的 형태의 經濟發展을 꾀하기 위해 아프리카 諸國들은 獨立과 아울러 각종 地域的 經濟協力體 구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프리카大陸내에서 地域的 經濟協력이 추진된 것은 1910년대 부터였다. 그러나 1960년대의 獨立이전까지의 地域的 經濟協力關係는 大陸內 原住民의 自生的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고 英國, 프랑스 등에 의해 植民地統治의 한 수단으로 구축된 것이었다. 植民地時代에 최초로 형성된 아프리카地域의 經濟統合은 1910년 英國의 植民地였던 南아프리카 및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랜드의 4개 地域間에 結成된 關稅同盟이었다.

그후 1917년 東部地域에서 당시 英國總督府 관할하에 있던 케냐와 우간다가 關稅同盟을 結成하였고 1927년 탄자니아가 加入하였다. 이들 3個國은 1967년 東아프리카共同體(EAC)로 재 結합되어 相互結束을 다져오고 있다. 이러한 英語圈(anglophone)에서는 1973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양국에 의해 結成된 마노강同盟(MRU) 등 다수의 經濟統合 내지 經濟協力機構가 結成되고 있다.

한편 佛語圈(francophone)地域에서는 193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와의 通貨協定을 통해 프랑 圈을 형성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늘날 EC와 아프리카諸國을 잇는 Lomé協定の 기초가 되어 왔다. 佛領아프리카地域內에서 貿易自由化를 위한 協力關係는 매우 다양하다. 1964년부터 中部地域에 위치한 가봉, 콩고,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中部아프리카關稅經濟同盟(UDEAC)을 結成하고 있으며 中部地域에서는 1974년 아이보리코스트,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어퍼볼타간에 西아프리카經濟共同體(CEAO)를 結成하였다. 그외에도 1950년대에 設립된 統合委員會(conseil de l'entente)와 아프리카-마다가스칼同盟(UAM) 등이 있다.

이러한 아프리카地域에서의 協力は 英語圈, 佛語圈 및 기타地域으로 구분되어 이들 이질적인 文化권간의 相互交流가 이루어지지 않아 汎아프리카協力和 近代的 經濟發展에 커다란 제약 요인이 되어 왔다. 아프리카諸國은 1970년대 이후 이러한 障礙要因을 제거하기 위해 言語障壁을 초월한 광범위 協力體系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1975년 5월 CEAO와 MRU가 중심이 되어 오늘날 아프리카지역에 있어서 經濟統合의 대표적 기구로 지목되고 있는 西部아프리카諸國 經濟共同體(ECOWAS)를 結成하게 되었다.

(2) 西部아프리카諸國 經濟共同體(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a) 西部아프리카諸國 經濟共同體의 設立目的

ECOWAS는 1975년 5월 나이지리아의 수도 Lagos에서 調印된 西아프리카 15個國간의 共同體設立條約(Treaty of Lagos)에 의해 創設되었으며 同條約의 主要目的은 加盟諸國間 貿易促進, 相互協力 및 經濟自立化에 있다. ECOWAS의 加盟國은 베닌, 기네아비소, 나이지리아, 코트디브와르, 세네갈, 감비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가나, 말리, 토고, 기네아, 니제르, 모리타니아, 어퍼볼타 등이며 1977년 캄페르디가 加入하여 現在 16開國으로 構成되어 있다.

(b) 西部아프리카諸國 經濟共同體의 主要政策

① 關稅同盟

ECOWAS가 현재 추진 중인 共同政策中 가장 중요한 과제는 關稅同盟의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다. Lagos條約에서는 條約發效 후 15년간에 걸쳐 加盟國간에 關稅同盟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처음 2년간의 第1段階에서는 域內關稅引下, 新規關稅設定 및

關稅引上의 禁止措置를 취하며, 그후 8년간의 第2段階에서는 殘餘關稅를 인하하여 최종적으로 域內關稅를 철폐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 5년 동안에는 對外關稅隔差를 조정하여 共通關稅 및 共通關稅分類表를 만들도록 예정하고 있다.

② 關稅輸入補償

域內關稅 철폐로 인해 財政收入이 크게 감소된 국가에 대하여는 補償金을支給하고 域內貿易自由化에 의해 經濟的 혼란이 야기된 국가에 대해서는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③ 國別政策의 調整

勞動力, 用役 및 資本의 自由移動을 보장하고 農業, 工業 및 기타부문에서의 각국간 政策을 조정하여 共同開發事業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는 加盟國間 域內여행이 Visa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共同通信網, 共同道路表示基準이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1983년 首腦會議에서는 단일의 ECOWAS通貨圈 形成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졌다.

④ 에너지政策

1981년부터 域內의 에너지資源開發, 에너지의 使用과 그 效率性 增大 및 對替에너지開發에 대한 共同協力이 취해지고 있으며 1982년에는 에너지資源開發基金이 창설되었다.

이외에 1982년에는 2000년까지 地域別自給自足を 목표로 共同의 農業開發戰略을 수립하고 있으며, 1981년에는 相互不可侵協定을 체결하고 공동의 防衛政策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듯 ECOWAS에서는 1980년대 이후 貿易, 農業, 通信, 交通 및 國防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經濟統合體로서의 共同政策을 구현해 오고 있다.

그러나 ECOWAS는 각 加盟國間에 關稅制度가 相異하고 文化的 異質性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밀도있는 制度的 統合에 이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V.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에 관한 理論的 接近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國際經濟統合理論은 先進市場經濟를 대상으로 그들의 經濟學者들에 의해 生成·發展되어 왔다. 이에 先進經濟와는 國際政治·經濟的 및 國內社會·經濟的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狀況에 있는 開發途上國의 經濟에 適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임은 自明하다. 따라서 본 章에서는 開發途上國 經濟의 特性 및 問題點을 알아보고 先進地域 統合理論의 適用限界性을 살펴본 다음 최종적으로 開發途上國 經濟統合의 接近方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開發途上國經濟의 特性⁷⁰⁾

開發途上國으로 분류되는 모든 國家가 同一한 特性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人口, GNP, 政治, 社會, 經濟制度, 因習 등에 있어서 그들간에도 상당한 差異가 있다. 즉 1次產品을 輸出하는 開發途上國과 輸入하는 開發途上國, 自然資源이 풍부한 開發途上國과 勞動資源이 풍부한 開發途上國, 石油輸出國과 石油輸入國 등과 같이 開發途上國間에 相異한 特性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開發途上國 問題에 대한 一律的인 接近方法보다는 類似한 特性을 가지는 開發途上國間的 個別的인 接近方法이 有用할 것으로 여겨진다.

開發途上國의 經濟的인 特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供給能力이 不足하다. 즉 供給能力을 決定하는 主要因인 投資를 위한 財源(貯蓄)이 적어서 供給 내지 生産不足現象이 나타난다.

둘째, 國內經濟構造가 硬直的이다. 즉 經濟構造의 二重性이 나타나 供給 및 需要가 價格變化 등에 대해 매우 非彈力的이 된다. 예컨대, 產業間, 生産性 隔差가 심하여 技術 등의 相互代替性이 결여되어 있고, 大規模產業과 小規模產業間 産業規模의 差가 심하여 規模經濟의 利益에서도 큰 差異를 보인다. 또한 工業生産用 中間投入財의 상당 부분이 外國으로 부터 輸入된다. 이러한 것은 대개 非競爭的인 輸入⁷¹⁾의 형태를 띄어 輸入構造의 硬直性을 낳게 된다. 金融市場에도 公金融市場과 私金融市場으로 양분되어 金利水準, 信用限度, 去來메카니즘 면에서 상당한 差異를 나타낸다.

셋째, 慢性的인 國際收支赤字와 外債의 累積問題가 있다. 즉 外換갭(foreign exchange gap)의 發生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國際金融市場에서의 信認도가 높지 못하여 借入條件이 나쁘므

70) 崔明周, “國際收支理論의 發展過程과 開發途上國의 國際收支問題”, 經營經濟, 1983. 3, 啓明大學校 產業經營研究所, pp. 224~5.

71) 非競爭輸入(non-competitive imports)이라 함은 國內에서 生産이 不可能한 財貨의 輸入을 말한다.

로 導入된 外貨에 대한 利子 부담 또한 커져서 外債의 累積的 增大現象을 볼 수 있다.⁷²⁾

네째, 國內市場의 狹小로 인해 規模의 經濟 실현 등이 어렵다.

다섯째, 第1次產品 輸出의 特性이 지속되고 점점 惡化되고 있다.

여섯째, 開發된 國家와 低開發 國家間의 所得隔差가 날로 增大된다.

일곱째, 財政, 經濟政策 및 技術, 海外市場에의 接近 등 기본적인 決定의 諸部分이 外生的 性格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國際政治的 交渉能力이 弱하다. 즉 經濟力이 취약하고 종전에 政治的으로 豫속되었던 사실 등으로 國際政治經濟的 協商에서 發言權이 약하다. 開發途上國間 國際카르텔 형태인 OPEC(石油輸出國機構)가 結成됨에 따라 70년대 이래 對先進國 交渉能力이 다소 向上되긴 하였으나, 經濟力 및 社會·文化的 隔差가 여전히 開發途上國들은 여전히 劣勢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2次大戰 이후 國際貿易과 通貨秩序의 基盤이 된 GATT와 IMF體制의 形成過程에서는 물론 그 결과에서 先進國 위주의 一方的인 것이 되었다는 점은 開發途上國의 국제적 劣勢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2. 經濟統合에 대한 一般的理論 適用의 限界

(1)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의 特性

1960년대 이후 本格화된 開發途上國의 經濟統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⁷²⁾

첫째, 域內國家들간의 異質的인 要素가 常存해 있으며, 共同體를 構成할 수 있는 同質的인 要素를 찾기가 어렵다.

둘째, 地理的으로는 인접하여 있으나 運送手段의 미발달로 運送費가 많이 들어 關稅引下의 效果를 그 만큼 상쇄시킨다.

세째, 市場擴大로 인한 貿易創出效果보다 貿易轉換效果가 더 크게 발생됐다.

네째, 經濟統合으로 인한 利益分配에 문제가 발생했다. 즉 經濟統合으로 인한 效果가 상대적으로 工業化가 많이 추진된 國家로 統合利益이 귀속되었다.

다섯째, 統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國家主權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기 마련인데 開發途上國의 경우 政治的 성숙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72) 80년대 들어서 開發途上國들의 外貨累積과 이에 따른 國際通貨秩序의 危機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73) 설영기, “先進國과 開發國에 있어서의 地域經濟統合 比較研究 : EC와 ASEAN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慶州大學論文集, 第1集, 1982, p. 232.

(2) 開發途上國 經濟統合의 問題點

(a) 相互利害關係의 調整

開發途上國들의 經濟統合에서는 統合후에 低開發狀態에서 조속한 開發을 위하여 代替的인 면서도 補完的인 工業構造를 동시에 指向하고자 하는 意慾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各國의 國益과 결부되어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한 의욕과 國益主張의 자체가 代替的 同質關係를 초래하여 地域統合計劃의 調整에 차질을 낳고 심하면 相剋關係로까지 돌입할 수 있다.

(b) 域內外 經濟協力 關係의 調整

統合體 내의 각국이 부득이한 경우 域外先進國과의 援助·貿易 등을 통한 調整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域內의 다른 加盟國들과의 利害에 저촉될 경우가 있다. 이럴때 域內와 域外의 동시적인 調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c) 經濟的·經濟外的 요인에 대한 調整

生産과 消費의 再分配 機能이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大市場의 形成에 의하여 성립된 大企業이 獨寡占價格을 형성하여 獨寡占體制를 강화한다면 統合體 내에 있어서 經濟의 安定的 成長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完全雇傭政策을 비롯한 獨占規制, 財政, 金融, 社會福祉 등의 經濟적 요인에 대한 정책과 政治安定 등의 經濟外적 요인에 대한 정책이 선행적으로 統一되고 調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各國의 國益主張과 域內外 調整의 복잡성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다.

(d) 能率原則과 平衡原則의 調整

開發途上地域의 經濟統合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域內諸國間 發展隔差의 확대현상이라 할 수 있다. 域內 發展隔差의 調整은 결국 域內 分業關係를 어떻게 調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大市場의 經濟的 利益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自由競爭原則과 能率原則에 입각한 分業原理가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發展隔差 및 不均衡問題가 야기되므로 開發途上地域의 경우에는 能率 못지않게 상호간의 均衡發展을 도모할 수 있는 平衡原理가 중요시 된다. 따라서 이 두 원리의 조화 여부가 成敗의 關鍵이 된다 할 수 있겠다.

(e) 多國籍企業의 影響

1970년대 이후 多國籍企業의 對 開發途上國進出이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開發途上國들은 現地에 진출한 多國籍企業을 통해 先進資本과 先進技術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多國籍企業에 의한 영향은 開發途上國의 工業化政策을 원활하게 해 주고 成長을 촉진하는 프러

스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을 고려할 경우 多國籍企業의 대두는 반드시 開發途上國間의 市場統合政策에 유리한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國際적으로 獨寡占的 市場支配力을 행사하고 있는 多國籍企業이 開發途上國에 진출해 있을 경우 開發途上國 相互間의 經濟統合은 先進資本의 市場支配力을 더욱 확대시켜 주는 機會를 제공해 줄 뿐 開發途上國 상호간의 市場的 結束을 피하는데는 오히려 장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에서는 이러한 多國籍企業의 進出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 開發途上國 經濟統合에 대한 一般的 理論適用의 限界

Viner로부터 출발하여 Lipsey에서 완성되는 傳統的 經濟統合理論은 貿易創出效果와 貿易轉換效果에 分析의 軸점을 두었다. 따라서 關稅同盟의 形成이 靜態的 資源配分과 관련된 厚生變化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經濟統合이 經濟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與否를 분석하였다. 開發途上國 經濟의 狀況에 비추어 Viner와 Lipsey는 각각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이 有益하지 못함을 示唆한다. Viner의 理論에 따르면 開發途上國은 先進工業國과는 물론 그들간에도 經濟構造가 補完的이므로 貿易轉換效果가 貿易創出效果를 초과하여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은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Lipsey理論에 비추어 볼 때, 開發途上國間보다 先進國과의 貿易比重이 크고 國內 支出에 대한 貿易의 比重이 크므로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에 따른 厚生增大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傳統的 經濟統合理論은 靜態的인 分析에 그침으로써 經濟發展의 過程에 있고 經濟外的인 要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開發途上國의 特性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즉 關稅同盟의 形成이 規模의 經濟, 國內生産 및 消費構造 등 動態的인 要因들에 미치는 效果를 간과함으로써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問題에 대한 適切한 接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動態的 接近理論은 市場構造의 競爭性, 內部經濟 및 外部經濟의 실현 등 經濟統合의 動態的인 측면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發展途上에 있는 動態的인 開發途上國의 特性에 비추어 종래의 靜態的理論에 비하여 더 適合한 接近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理論은 開發途上國經濟에 매우 중요한 問題들 즉 外換의 使用額, 國際的 交涉能力 등에 미치는 效果를 간과하고 있으므로 역시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 問題에 그대로 適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開發途上國 經濟統合에 따르는 보다 適合하고 새로운 理論의 開發이 요구되며 이는 앞으로 더욱 진지하게 研究·發展되어야 할 課題임에는 틀림없다.

3.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의 方向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理論은 총체적으로 Cooper-Massell의 工業化選好論, Linder의 外換節約論 및 Andic의 費用-利益分析⁷⁴⁾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理論은 開發途上國 經濟의 一面만을 강조하여 部分的인 分析에 그치고 있거나 傳統的 統合理論과의 연계성이 없는 등의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이에 開發途上國 經濟의 特殊性을 포함하고 傳統的 統合理論도 수용하는 一般的인 接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에 있어서 기존 統合體의 실패를 分析해 봄으로써 開發途上國 經濟 統合 問題에 관한 接近方法을 모색해 보는 일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1961년 發足하여 1980년말 解體된 中南美地域의 代表的인 經濟統合體인 LAFTA에 대한 評價를 통하여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問題에 관한 보다 適切한 接近方法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中南美地域에 尙存하는 많은 經濟統合機構 중 LAFTA는 地域範圍, 人口 및 經濟規模面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LAFTA는 그 오랜 歷史에도 불구하고 EC와는 달리 보다 발전된 段階로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1980년말을 기하여 完全解體되고 새로운 統合機構로 轉換됨으로써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問題에 많은 示唆을 주고 있다. 1961년 이래 中南美地域의 經濟統合과 貿易自由化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온 LAFTA가 그 母體가 되었던 몬테비데오 條約의 만기인 80년말까지 域內 貿易自由化를 달성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이에 會員國들은 새로운 經濟統合機構인 LAIA로 종전의 LAFTA를 대체하기로 하였다.

LAIA는 LAFTA의 단순한 延長은 아니다. LAFTA 궁극의 目標였던 貿易의 完全自由化에 의한 中南美共同市場의 실현이 결국 이룩되지 못하게 되자 過去의 統合方式에 대해 反省하고 새로운 統合方式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종래의 LAFTA가 本來의 貿易自由化 計劃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결국 해체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制度的 要因에서 그 주된 原因을 찾을 수 있다.⁷⁵⁾

74) F. Andic, S. Andic and D. Dosser, *A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1)

Andic의 費用-利益分析이란 工業化選好論과 外換節約 理論의 綜合理論으로서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에 관한 理論의 一般化를 시도한 것이다. 輸入代替 對象에 工業品 뿐 아니라 外換節約이 가능한 다른 財貨 用役도 포함할 경우, 工業化 外換節約理論의 綜合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또한 Andic은 工業化理論을 費用利益分析(Cost-benefit analysis)으로 대체함으로써 측정이 어려운 需要曲線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편 國內産業活動의 供給曲線은 外換節約 및 工業化에 의한 利得과 各産業의 資本所要量과 貿易轉換에 의한 損失 등으로 구성하여 分析하였다.

75) 裴光宣, “中南美諸國의 經濟統合과 貿易自由化計劃,” 地域經濟, (서울: 國際經濟研究院, 1980. 11.)

첫째, 貿易自由化에 관한 各國別 리스트와 共通리스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缺陷이 顯在化되었다. 둘째, 몬테비데오條約에서 域內 各國간 經濟發展水準의 현저한 差異에 대한 補完裝置 등의 배려를 하지 않았다. 셋째, 域內貿易이 진행됨에 따른 利益의 分配에 대한 會員國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특히 70년대 들어 域外國에 대한 輸出붐으로 域內貿易擴大의 절실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넷째, 會員國간 地理的 거리가 먼데다 交通·通信手段이 未發達되어 輸送 등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要因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LAFTA는 中南美地域 開發途上國들의 特殊性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傳統的인 統合方式을 택함으로써 해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때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問題는 종래의 接近 方法에 의해 올바르게 관찰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여 종래의 理論들을 全面 거부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開發途上國의 對內外的인 特殊性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들간 經濟統合에 따른 得失을 보다 精確하게 評價分析할 수 있는 새로운 接近方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傳統的인 經濟統合理論과 開發途上國간 經濟統合理論에 관한 既存理論들의 內容과 問題點들 속에서 開發途上國간 統合에 관한 適切한 새로운 接近의 基本方向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傳統的인 靜態的 接近, 動態的 接近 및 既存의 開發途上國간 統合理論을 흡수하여 綜合的으로 補完·體系化하여야 한다. 內部經濟 등 動態的 要因들과 開發途上國 經濟에 절실한 外換·工業化 問題 등을 감안한 擴張된 貿易轉換 및 貿易創出效果 分析이 필요하다. 요컨대 開發途上國간 經濟統合 형성에 관한 評價基準을 貿易에만 局限하지 말고 工業化, 外換使用, 國內貯蓄 등 經濟發展에 영향을 주는 主要要人들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開發途上國들은 일반적으로 工業生産의 擴大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輸入보다는 國產化에 따르는 所得損失을 감수하더라도 工業化를 추진하여야 한다. 先進諸國간 經濟統合이 效率性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하여 開發途上國들은 域內 工業生産을 중시하므로 國際的인 次元보다는 會員國間 상대적 의미에서의 比較優位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域內生産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 經濟統合을 전후로 각 會員國이 감수해야 하는 費用과 얻는 利益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補償(compensation)의 問題가 발생한다.

따라서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요소는 域內 産業立地 및 統合利益의 配分, 調整이라 할 수 있다. 會員國間 無差別待遇에 입각하여 經濟障壁을 제거하는 單純한 消極的 統合보다는 會員國間 政策的 調整, 接近 내지는 統一은 域內 生産物 및 生産要素移動을 最適化하고 資源配分の 효율성을 提高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는 積極的 統合이 강조되어야 하며, 市場메카니즘에 의존하기 보다는 會員國間 파레트의 最適의 실현을 위하여는 政策的 조정과 合意가 무엇보다도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均衡成長(balanced growth)과 不均衡成長(unbalanced growth)의 調和를 이루어야 한

다. 均衡成長은 農業과 工業, 原料産業과 製品産業, 社會間接資本과 直接生産部門, 輸出産業과 內需産業이 相互需要 또는 補完的 需要를 誘發하여 市場需要力과 生産能力을 均衡되게 維持시킴으로써 産業간에 水平的 均衡과 垂直的 均衡을 이루도록 經濟를 成長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不均衡成長은 資本, 勞動, 技術 등 生産要素 供給의 有限성과 投資의 不可分性, 産業간 生産 및 投資效率의 차이,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産業構造改編이라는 基本課題의 實現 등을 前提로 하고 있다. 不均衡成長論은 供給과 需要간의 均衡이 아닌 不一致가 成長의 促進要因이라고 보고, 어떤 特定産業에 重點적으로 投資해서 이 産業에 一時的인 供給過剩 즉 市場不足이 發生하면 이 不均衡要因이 다른 聯關産業을 이끌어 올려서 均衡點을 모색하는 것을 經濟開發의 戰略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特定産業에 대한 不均衡的 投資로 需給不均衡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이 不均衡을 除去하여 均衡을 이루고, 다시 均衡을 깨뜨려 새로운 不均衡을 創造하면서 優先投資産業을 先導로 하여 經濟를 開發하려는 것이다.

네째, 對外的인 分業體系와 관련하여 對外指向的 成長과 對內指向的 成長의 效率的인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對外指向的 成長은 일반적으로 輸出擴大率이 經濟成長率보다 크고 따라서 貿易依存도가 높아 貿易이 經濟成長을 先導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對內指向的 成長은 輸出擴大率이 經濟成長을 따르지 못하고, 따라서 貿易이 經濟成長에 있어서 소극적 役割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들 兩者의 中間의 경우를 輸出中立型 成長이라고 한다.

이들간의 적절한 조화가 域內 國家들의 利益增大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對外指向的 成長을 하는 경우에도 國際分業形態가 수직적分業의 形態를 갖는 産業別 特化로 되는가, 또는 수평적 分業의 形態를 갖는 産業內特化로 되는가에 따라 國家간의 依存關係는 달라지게 된다.

다섯째, 統合의 形態를 여러가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通商 經濟統合을 加盟國간 밀착程度에 따라 一律적으로 自由貿易地域, 關稅同盟, 共同市場, 經濟同盟 및 完全한 經濟統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全般的인 統合形態 뿐 아니라 部分的인 統合형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全産業이 아닌 一部産業에 대한 統合과, 全面的인 貿易自由화가 아닌 部分的인 自由化등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성을 충분히 지닌다.

여섯째,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發展段階의 격차가 큰 만큼 互惠性이 매우 중요한 課題가 된다. 만약 地域貿易을 市場의 自由競爭에 맡기면 大市場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많은 유익한 産業이 域內 先進國에 集中하게 되고 域內 低開發國은 域內 先進國에 國內市場을 開放하는 결과가 되어 低開發國은 對 域內 先進國 輸出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域內 저개발국은 經濟統合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에 있어서는 産業調整協定과 같은 것이 全加盟國의 合意에 의해서 결정되고 計劃적으로 分業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 加盟國이 統合目標

를 확실히 하여 그들의 一國單位의 開發計劃과 비교함으로써 統合利益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고, 역내 低開發國이 統合過程에 均等하게 참가하도록 하며 輸入代替와 더불어 貿易自由化를 점진적으로 擴大함으로써 統合過程 全體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經濟發展段階가 相異한 諸國間의 統合에서는 各國間의 互惠性을 중시하여 적어도 統合의 初期段階에서 計劃的 分業이 필요하고 發展段階가 是正될 때까지 競爭機能을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經濟發展段階가 다양한 현재의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에 있어서는 互惠性을 重視하는 統合模型이 構想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開發途上國間의 經濟統合에 있어서 域內 諸國間의 發展段階의 격차가 크다는 관점에서 域內 後進國의 경우에는 開發創出的이고 域內 中進國에는 成長創出的이며 域內 先進國에 있어서는 安定創出的인 模型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은 對外經濟政策에서 적극적인 調和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상이한 發展段階를 가진 諸國間의 統合目標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先·後進國間에 새로운 地域的 共同協力體系가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서 共同協力이라는 것은 漸增하는 相互依存의 域內貿易, 投資 및 援助에 대한 새로운 地域的 接近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덟째, 開發途上國間의 심한 發展隔差에 따른 經濟統合 利益의 偏在可能性에 대비하여 適切하고도 具體的인 利益分配메카니즘을 設定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產業補完協定과 地域別投資計劃을 고려하여야 한다. 先進工業國間의 經濟統合은 市場의 統合을 통해 競爭促進, 規模의 經濟 및 域內市場에서의 分業利益 추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域內貿易의 自由化措置가 統合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域內貿易의 自由化(liberalization of intra-regional trade)는 先後進地域을 막론하고 經濟統合을 형성하는 一次的 條件이 된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의 경우 주요 輸出品이 주로 賦存資源에 기초를 둔 一次產品 내지는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이므로 이들 相互間의 交易의 幅은 넓지 못하다. 따라서 域內貿易이 擴大되는 데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 또한 地域內에서 工業이 進展된 국가와 전형적인 一次產品의 生産, 輸出이 지배되고 있는 국가가 병존할 경우 域內 무역이 擴大될 소지는 크나 域內 工業國이 域內貿易을 지배할 우려가 있다.

이렇듯 域內 貿易自由化의 성과가 制限되거나 不均衡的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政府間 協力에 의해 計劃的, 人爲的으로 國別產業配置를 보완적으로 조정하는 政策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조정정책으로는 產業補完協定과 地域別 投資計劃 등을 들 수 있다.

產業補完協定(complementary agreement for industries)은 統合體 加盟國間에 產業別 혹은 部門別로 貿易을 自由化하여 당해산업에 대한 市場狹小의 장벽을 완화하며 域內貿易을 擴大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產業補完協定은 一國에 존재하는 超過生産能力을 共同體規模에서 공동이용하고 기존산업에서 規模의 經濟를 촉진하는데 有益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業化가 어느 정도 진전된 國家間的 經濟統合에서도 有效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協定은 域內市場이 여러 要因에 의해 구조적으로 歪曲되어 있어 價格制度만으로는 地域別, 國別特化를 유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域內特化를 效率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開發途上地域에서는 域內特化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加盟諸國間的 經濟發展段階가 상이하여 經濟的 不均衡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균형확산을 조정하는 統合政策으로 地域別 投資計劃(inter-country agreement for regional based investments)의 樹立을 들 수 있다. 이는 新規産業의 形成과 配置調整을 통해 국제간의 投資를 촉진하며 域內的 産業立地를 조정하고자 하는 統合方法이다. 즉 이러한 統合方法은 國際間에 합의된 投資計劃을 수립하여 地域別로 安配된 新規産業의 설립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고 加盟國 全體의 複合需要를 보다 經濟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開發途上國의 여러가지 特殊性에 비추어 볼 때 傳統的 經濟統合理論에서 不適切한 基準에 입각하여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을 有益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結論이다. 하지만 開發途上國間的 經濟統合이 반드시 有益하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은 靜態的 측면뿐만 아니라 動態的 측면과 國際政治·經濟的 측면까지 綜合할 경우 傳統的 統合理論에서 示唆하는 것과는 달리 開發途上國간 統合의 利益이 발생할 可能性이 있거나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先進市場經濟에 비해 相互利害對立이 더욱 심하여 開發途上國간 經濟統合의 實現은 매우 어려울 可能性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前述한 바 있는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의 效果를 理由로 經濟統合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VI. 要約 및 結論

1833년 獨逸의 關稅同盟에 起源하는 國際經濟統合에 관한 理論은 그 후 100년이 넘어서 Viner의 關稅同盟理論에 의해 체계적으로 定立되기 시작하였다. 關稅同盟 형성이 加盟國의 社會的 厚生에 미치는 영향을 靜態的 측면에서 貿易創出과 貿易轉換效果를 토대로 生産效果를 分析한 Viner의 理論은 그후 Meade와 Lipsey 등으로 계승되면서 消費效果分析에 있어 보완과 수정을 거듭하였고 Lipsey는 關稅 및 交易條件效果 등의 導入을 통하여 關稅同盟의 一般理論을 定立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Bhagwati와 Melvin 등에 의해서 生産效果分析이 더욱 상세하게 이루어 졌고, Johnson 및 Bhagwati를 비롯한 여러 學者들에 의해서 關稅同盟의 綜合效果分析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이른바 傳統的 經濟統合理論을 完成하게 된다.

傳統的 經濟統合理論에서 무시되었던 動態的 요소들은 Balassa에 의해 適示되고 있다. 그는 經濟統合의 形成이 競爭企業의 活動領域, 規模의 經濟 및 外部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함으로써 動態的 統合理論을 定立하게 된다.

그 후 Denieou, Scitovsky 등에 의한 大市場理論이 成立되었으며 이러한 經濟統合의 動態的 效果의 규명은 60년대 이후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 形成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正統經濟統合理論이 開發途上國간 經濟統合 問題에 適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인식하고 Mikesell, Linder, Cooper와 Massell 및 Bhambri, Harrod, Wionczek 등은 開發途上國에 適合한 經濟統合理論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問題인 工業化와 外換節約에 관심을 集中시키며 開發途上國간 經濟統合에 따른 利益이 發生할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開發途上國 經濟의 特정한 일면만을 強調하는 部分理論에 그치고 있어 開發途上國의 經濟統合 問題를 보다 一般的이고 綜合的으로 다룰수 있는 새로운 接近의 필요성이 절실히 졌다.

이러한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理論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定理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經濟統合에 대한 接近方法上的 差異때문에 또한 先進·開發途上地域간의 經濟內外的 特性을 달리하는 이유 때문에 關稅同盟論을 근간으로 하는 先進地域의 經濟統合理論은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둘째, 先進地域의 經濟統合理論이 開發途上地域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理論은 없지만 動態的인 觀點에서 貿易轉換效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에 대한 構成原理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경우에도나 적용할 수 있는 一般화된 分析 아니었다.

셋째, 經濟發展의 段階가 비슷한 先進地域에서는 經濟統合에 따른 利益分配메카니즘으로 比較優位의 原理나 競爭原理가 적합할 수 있으나, 經濟發展의 段階가 서로 다른 開發途上國간

에 있어서나 先進地域과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에 있어서는 새로운 分業原理로써 衡平의 原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本 研究에서는 市場擴大를 통한 工業化基盤의 조성, 效率的인 輸入代替 및 貿易構造의 改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開發戰略上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의 期待效果를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보았다.

첫째, 經濟統合은 加盟國 상호간에 國內市場을 開放하는 것이므로 狹小한 國內의 工產品市場을 統合體規模로 확대시키며 加盟國간의 貿易을 촉진하게 된다.

둘째, 工業部門에서의 競爭力向上은 對域外 輸出機會를 확대시킴으로써 開發途上國의 貿易構造를 개선시킨다.

셋째, 經濟統合으로 인한 市場擴大는 합리적인 輸入代替政策의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넷째, 經濟統合에 의한 地域規模의 輸入代替政策은 非投入財의 域內 自給度を 높임으로서 外換의 節約을 가져오며, 절약된 外換으로 投入輸入의 폭을 넓혀준다.

다섯째, 經濟統合은 各 國家간의 合意에 의한 市場統合을 의미하므로 對 域外 貿易協商 등에서 統合된 地域의 交渉力を 강화하는 등의 經濟外的인 效果를 수반하게 된다.

한편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問題에 대해 이들 地域이 先進地域과 다른 一般的 特性으로 ①供給能力이 不足하다. ②國內經濟構造가 硬直的이다. ③만성적인 國際收支의 赤字와 外債의 累積問題가 있다. ④國內市場이 협소하여 規模의 經濟를 實現하기가 어렵다. ⑤國際的 交渉能力이 약하다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先進地域과는 상이한 조건에 있는 開發途上國간의 經濟統合에 있어서 一般的理論의 適用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 이에 開發途上國經濟에 적합한 새로운 接近方法은 資源配分의 效率性에 입각한 靜態的 厚生 측면 뿐 아니라, 成長과 관련된 動態的要素와 國際的交渉能力의 변화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요컨대 LAFTA의 완전해체에서 잘 볼 수 있듯이 開發途上國간 經濟統合問題는 종래의 視覺과는 다른 새로운 接近方式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研究結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開發途上國間 經濟統合의 方向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傳統的인 靜態的 接近, 動態的 接近 및 既存의 開發途上國간 統合理論을 흡수하여 綜合的으로 補完·體系化하여야 한다.

둘째, 域內 産業立地 및 統合利益의 配分·調整이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均衡成長과 不均衡成長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對外的인 分業體系와 관련하여 對外指向的 成長과 對內指向的 成長의 效率的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統合의 形態를 여러가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全般的인 統合形態 뿐만 아니라, 部分的인 統合形態 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互惠性を重視하는 統合模型이 構想되어야 한다.

일곱째, 對外經濟政策에 있어 적극적인 調和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域內 諸國間의 심한 發展隔差에 따른 經濟統合 利益의 偏在可能性에 대비하여 適切하고도 俱體的인 利益分配 메카니즘을 設定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産業補完協定과 地域別投資計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本 研究의 內容은 既存文獻에서 제시된 諸理論들을 文獻研究의 方法을 통해 정리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즉 實證分析을 통한 經濟統合의 效果分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주로 多數國間에 比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統計의 確保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既存의 분석기법 개발이 미흡한 점 등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向後 實證分析에 대한 接近方法과 分析技法의 開發은 經濟統合理論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 (1) 奇明鍾, 『東아시아 經濟統合의 展望에 關한 研究: 유럽共同體와 比較하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89.
- (2) 金世源, 『國際經濟秩序』, 貿易經營社, 1985.
- (3) _____, 『經濟統合의 理論과 實際』, 『國際經濟研究』, 世宗大學校 國際經濟研究所, 第6集, 1986. 12.
- (4) _____, 『貿易政策』, 貿易經營社, 1988.
- (5) _____, 『EC經濟·市場統合』, 韓國經濟新聞社, 1990.
- (6) 金信行, 『國際經濟論』, 法文社, 1982.
- (7) 金昌燮 譯: Bo Södersten, 『國際經濟學』, 比峰出版社, 1985.
- (8) 朴壽伊, 『國際貿易論』, 博英社, 1980.
- (9) 朴鍾植, 『國際經濟學』, 貿易經營社, 1986.
- (10) 朴振根, 『國際經濟學』, 博英社, 1984.
- (11) 裴光宣, 『中南美地域의 經濟統合과 貿易自由化計劃』, 『地域經濟』, 國際經濟研究院, 1980. 11.
- (12) 產業研究院, 『世界經濟의 地域主義 심화와 우리의 對應』, 『世界經濟動向』, 1988. 8.
- (13) 설영기, 『先進國과 開發國에 있어서의 地域經濟統合比較研究: EC와 ASEAN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慶州大學 論文集』, 第1集, 1982.
- (14) 孫明煥, 『經濟統合의 理論과 進展에 關한 考察』, 『忠南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論文集』, 第2集, 第2號, 1975.
- (15) 孫炳海, 『經濟統合論』, 法文社, 1990.
- (16) _____, 『低開發地域의 經濟統合理論에 關한 再吟味: 工業化政策과 市場統合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經商大學 論文集』, 第15號, 1987. 12.
- (17) 孫尚翼, 『90年代 再生을 위한 유럽의 움직임과 우리의 對應』, 『世界經濟動向』, 1988. 4.
- (18) 申鉉種, 『貿易政策論』, 博英社, 1987.
- (19) 安承喆, 『國際經濟의 理論과 政策』, 法文社, 1984.
- (20) 李敬儀, 『開發途上經濟의 開發戰略과 構造問題』, 『淑明女子大學校 韓國政治經濟研究所 論文集』, 第12集, 1983. 12.
- (21) 이남구, 『國際地域經濟』, 貿易經營社, 1988.
- (22) 李承鶴, 『經濟統合의 理論과 實際에 關한 考察』,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77.

- (23) 李中和, 『經濟統合理論에 관한 考察: 關稅同盟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2.
- (24) 李相出, 『A study on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安東大學 論文集』, 第3集, 1981.
- (25) 李英勳, 『太平洋地域經濟共同體 形成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4.
- (26) 尹康熙, 『經濟統合에 관한 理論的 考察』,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1989.
- (27) 鄭道泳, 『國際經濟』, 博英社, 1983.
- (28) 주명건, 『世界經濟論』, 博英社, 1986.
- (29) 崔明周, 『國際收支理論의 發展過程과 開途國의 國際收支問題』, 『經營經濟』, 啓明大學校 產業經營研究所, 1983.
- (30) 崔聖基, 『先進國型 經濟統合과 開途國型 經濟統合의 特性에 관한 實證的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9.

〈外國文獻〉

- (1) Allen, R. L., "Integration in Less Developed Areas", *kyklos*, Vol. XIV, Fasc. 3, 1961.
- (2) Andic, F., Andic, S. and Dosser, D., "A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1.
- (3) Balassa, B.,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9.
- (4) Bhambri, R. S., "Customs Union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Economica Internationale*, May, 1962.
- (5) Cooper, C. A. and Massell, B. F., "A New Look at Customs Union Theory", *Economic Journal*, Vol. 75, 1965.
- (6) _____, "Toward a General Theory of Customs Un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1965.
- (7) Dell, S., "A Latin American Common Market", London: Oxford Univ. Press, 1966.
- (8) Deniau, J. F., "The Common Market: its structure and purpose", London, 1960.
- (9) Elkan, P. G., "How to Beat Backwash: The Case for Customs Drawback Unions", *Economic Journal*, March, 1965.
- (10) Erbes, R., "L'Integration Economique Internationa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6.
- (11) Harberler, G., "Integration and Growth of the World Econom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4.

- (12) _____, "Further Remarks on the Problems of Integration of Less Development Countries", *Revista Brasileira de Economica*, ano. 20, No.23, 1963.
- (13) Harrod, R.F., "Book Review on S.Dell's Trade Block and Common Market", *Economic Journal*, Dec., 1963.
- (14) _____., "Economic Development and Asian Regional Cooperation", *Pakistan Development Review*, Spring, 1962.
- (15) Hicks, J.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Setting", *Essays in World Economics*, 1959.
- (16) Johnson, H.G., "The Economic Theory of Customs Unions", *Pakistan Economic Journal*, Vol. 10.
- (17) _____., "An Economic Theory Protectionism, Tariff Bargaining and the Formation of Customs Un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3, 1965.
- (18) _____.,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64.
- (19) Kahnert, F., "*Economic Integ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OECD Development Center Studies, 1969.
- (20) Kitamura, H., "Economic Theory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Undeveloped Regions", in M.S. Wionszer(ed.), *Latin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1966.
- (21) Linder, S.B., "*Trade and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Inc., 1966, Ch. III, Section 2.
- (22) Lipsey, R.G.,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 A General Servey", *Economic Journal*, Sept., 1960.
- (23) _____,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London : Weidenfeld and Nicolson, 1970.
- (24) List, F., "*The nation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London : Longmans Green, 1885.
- (25) Meade, J.E., "*The Theory of Customs Unions*", Amsterdam : North-Holland, 1955.
- (26) Mikesell, R.F., "The Theory of Common Markets and Developing Countries", Ch.9, in R.F. Harrod and D.C. Hague(eds.), *International Trade Theory in a Developing World*, Macmillan, 1963.
- (27) Myrdal, G., "*An International Economy*", New York : Harper and Row, 1964.
- (28) Meier, G.M.,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1963.
- (29) Nurkse, R., "*Problems of Capital Fromation in Under developed Countries*", 1953.
- (30) O'Brien, D., "Customs Unions :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historical

- perspectiv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8, 1976.
- (31) Sannwald, R.F. and Stohler, J., "*Economic Integration*",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1959.
- (32) Scitovsky, T., "*Economic Theory and Western European Integration*",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58.
- (33) Tinbergen, J.,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 : N. H. Co., 1965.
- (34) Viner, J.,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53.
- (35) Wionczek, M.S., "The Montevideo Treaty and Latin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Banco Nazionale del Lavoro, Quarterly Review*, Rome, June, 1961.

ABSTRACT

A Study on Economic integration direction of developing Countries

Choi Seung Ho
Major in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
Han Sung University

<Introduction>

After World War II GATT-IMF system that aimed at the world trade expansion and equilibrium through free trade and stabilization of foreign exchange was destroyed.

There has been a growing tendency that neo-protectionism in the trade and the regionalism, setting the goal at applying regionally the principle of liberal non-discrimination, are steadily sprea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rectio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theory from developing region. In doing so I introduced two approaches. One is free trade approach, the other is protective approach.

In Chapter II, with the aid of customs union theory, I dealt with the theoretics of economic integration for developed countries.

But many theories of economic integration were evolv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of Europe and expressly for the purpose of throwing light on the problems of economic integration in western Europe. Therefore, the theories of

economic integration need to be modified for application to the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ies. It is because economic integration among developed countries want to achieve economic gains by improving resource allocation, but the case for developing countries emphasizes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is reason, I dealt with the theoretics of economic integ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in chapter III.

In chapter IV,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economic integration in Western Europe, Central-East American and Africa regions. In Chapter V, it is to find the economic characteristic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aimed at approaching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a limitation of use of the general theory on the economic integration.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e survey are summarized as following :

- 1) Having the traditional static approach and dynamic approach and by absorbing the economic integration theory between the developing countries, it should be generally complemented and systematized.
- 2) Regional industry and distribution and adjustment of the integration benefit must be dealt with.
- 3) A balanced growth and unbalanced growth must be harmonized.
- 4) Outward growth and inward growth should be effectively harmonized.
- 5) I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partial integration as well as the overall integration.
- 6) A economic integration model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mutual benefits should be planned.
- 7) A positive harmonization in the outward economic policy should be made.
- 8) For any reorganization possibility in the benefit of economic integration according to the serious development gap between the regional countries, the

mechanism for proper and concrete beneficial distribution should be established.

- 9) A complementary agreement for industries and inter-country agreement for regional based investments should be considered.